



환경특별시 인천

#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1판)

- ◆ 동 보고서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300만 인천시민의 희망과 염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 ◆ 인천연구원의 관련 연구, 그간의 시민 건의사항, 인천시의 대정부·대정당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나열하기 보다는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20개 정책을 선별했습니다.
- ◆ 향후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동 지역공약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1판 발간일: 2021. 9. 26.



# 순서

I. 인천시민 안내서 .....	1
1. 仁心(인천시민의 마음)은 天心 .....	1
2. 인천시민의 주요 관심사항 .....	2
3. 인천광역시 일반현황 .....	6
II.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 .....	8
1. 「2022 인천 지역공약 20」 개요 .....	8
2. 준비 과정 .....	9
3. 분야별 지역공약 내용 .....	10
〈붙임〉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 상세본 .....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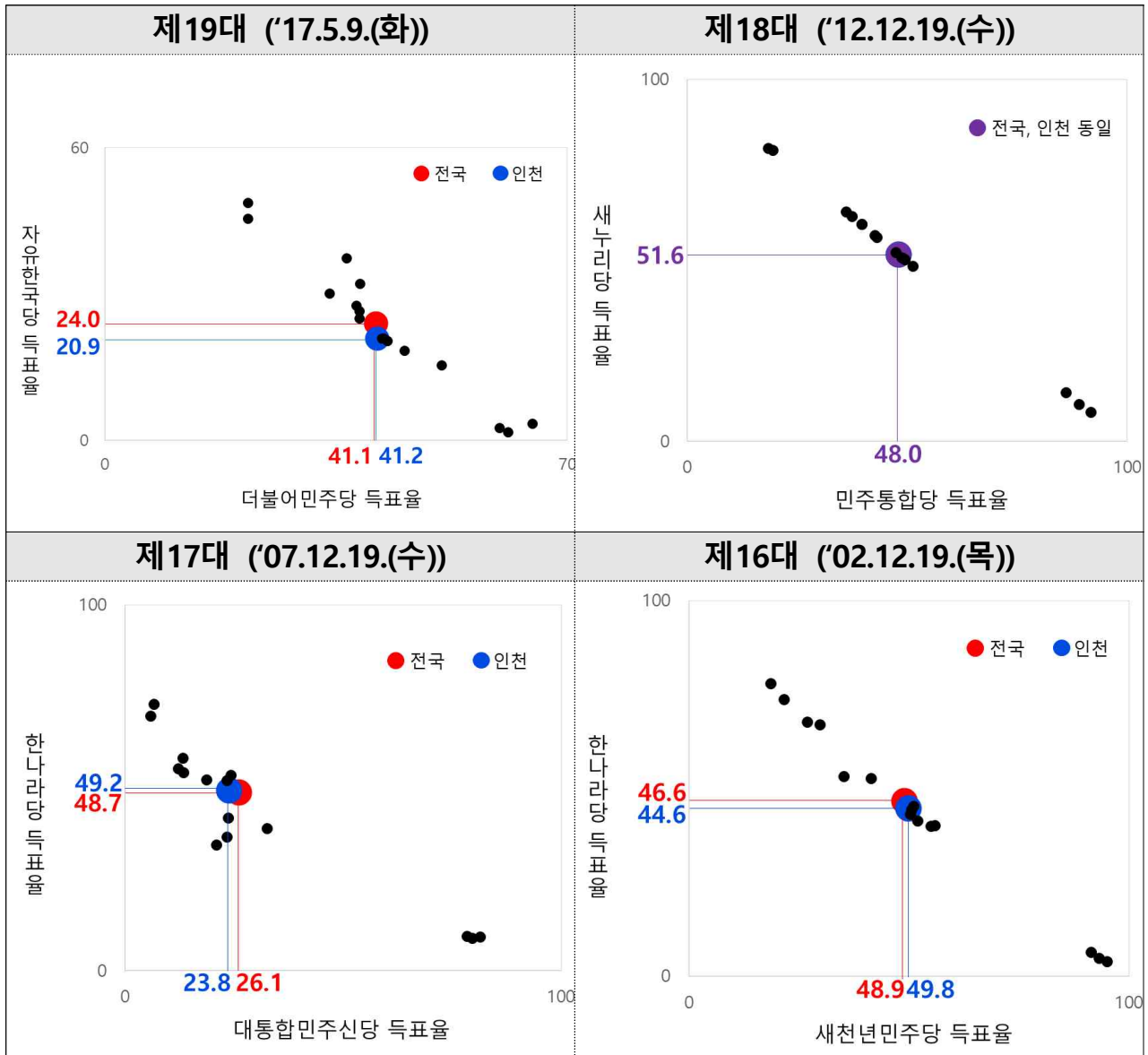
## 1

## 仁心[인천시민의 마음]은 天心

- 인천시민의 마음은 전국 민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바로미터
- 지난 4차례의 대선 모두에서 인천의 정당별 득표율은 전국(17개 시·도) 평균 정당별 득표율과 가장 유사

## &lt; 대통령 선거 득표율 (단위:%) &gt;

● 전국 ● 인천



### ① [환경] 환경피해와 자존심의 회복

○ 인천은 수도권 2,600만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지원도시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토지·대기·해양 오염 피해를 감내

- (토지) 30여 년간 생쓰레기를 직매립하는 후진국형 수도권 매립지 운영

\* 서울 난지도는 15년간 운영 vs 인천 수도권 매립지는 30년간 운영('92~)

\* 폐기물 반입량('20): 서울 120만톤(39.9%) > 경기 115만톤(38.4%) > 인천 65만톤(21.7%)

종류별 반입량('20): 사업장 172만톤(57.5%) > 생활 75만톤(25%) > 건설 53만톤(17.5%)

- (대기) 화석연료 중심 발전으로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 문제 발생

\* 에너지 자립도('20): 1위 인천 241% > 2위 충남 226% > 3위 경북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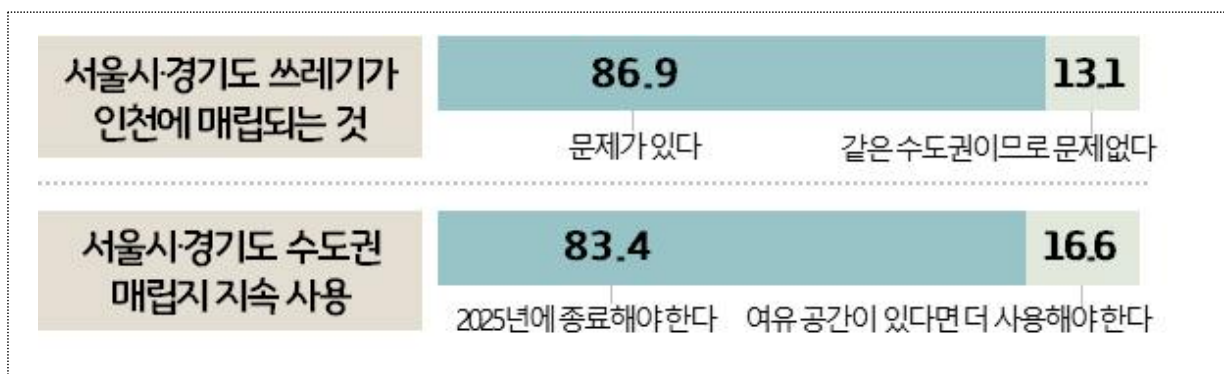
- (해양) 한강하구 쓰레기, 어업쓰레기 등으로 해양오염 문제 심각

\* 맨체스터대(2018), 인천 앞바다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세계 2위로 조사

☞ 인천시민의 환경피해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기본으로 다양한 환경이슈\*를 해결해 나갈 시점

\* 영흥화력발전소(1,2기) 조기 폐쇄('34 → '30),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저감, 산업시설에 빼앗긴 수변·친수공간의 회복 등

#### < 수도권매립지 관련 인천시민 인식조사 ('21.6월, 단위:%) >



## ② [균형발전] 신도시-원도심 간 상생 발전

### ○ 인천시 내 지역 간 인구·경제 불균형 심화

- \* '10년 대비 '20년 인천시 인구는 크게 증가(184,532명)하였으나, 동구(△17,121명), 미추홀구(△19,533명), 부평구(△72,531명), 계양구(△51,060명) 등 원도심 인구는 감소

### ○ 신도시가 남북축을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주변 등 동서를 가로지르는 원도심 지역의 낙후는 더욱 심화

- \*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동구 36.4%, 미추홀구 26.6% > 계양구 24.6% > 부평구 23% / 인천 전체 평균 18.8%

### ○ 서해5도, 강화도 지역은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접경·도서지역의 위험성과 교통불편으로 정주여건의 불편 발생

- ☞ 도서지역, 접경지역,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의 특별한 지원 필요

## ③ [교통·생활인프라] 3백만 대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 ○ 인천시민의 약 1/5이 시도 경계를 넘어 통근·통학을 하고 있고 하루 평균 왕복 출퇴근 시간은 전국 평균 대비 13분이나 많은 상황

- \* 출·퇴근 소요시간(왕복): 서울(96.4분) > 인천(92분) > 경기(91.7분) > 전국(79.3분) (※ 국가교통DB, '19.)

### - 현재 건설중인 신도시의 정주여건 보장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편리한 교통망 확보는 매우 중요

- \* 검단신도시: 약 6만 7천호('21.6월 입주 개시), 계양신도시: 약 1만 7천호(~'26), 루원시티 약 9천5백호(~'22), 검암역세권 약 7천호(~'24), 구월2지구(약 1만 8천호)(수도권 3기 신도시)

- ☞ 도시 간 경계를 넘는 통근·통학 등 생활권을 고려한 적절한 교통망 확충 필요

### ○ 인천의 생활인프라는 서울과 공유하면 된다는 중앙의 시각이 누적적으로 반영된 결과, 의료·문화 인프라 선정에서 계속 소외

- \* 인천은 울산과 함께 대학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 공항·항만을 통해 감염병이 유입되나 감염병 전문병원은 미지정
- \*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수: 전국 133.7개소 > 인천 113.6개소

- 민선7기 이후 빠르게 의료·문화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구 3백만 도시에 걸맞은 의료·문화 인프라 확충이 시급

\* 송도세브란스병원 기공식('21.2), 청라의료복합타운 서울아산병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1.7.) / 계양산성박물관('20.5.), 인천시민애(愛)집('21.7.), 국립인천해양박물관(~'24) 등

- ☞ 도시의 자족성 확보 및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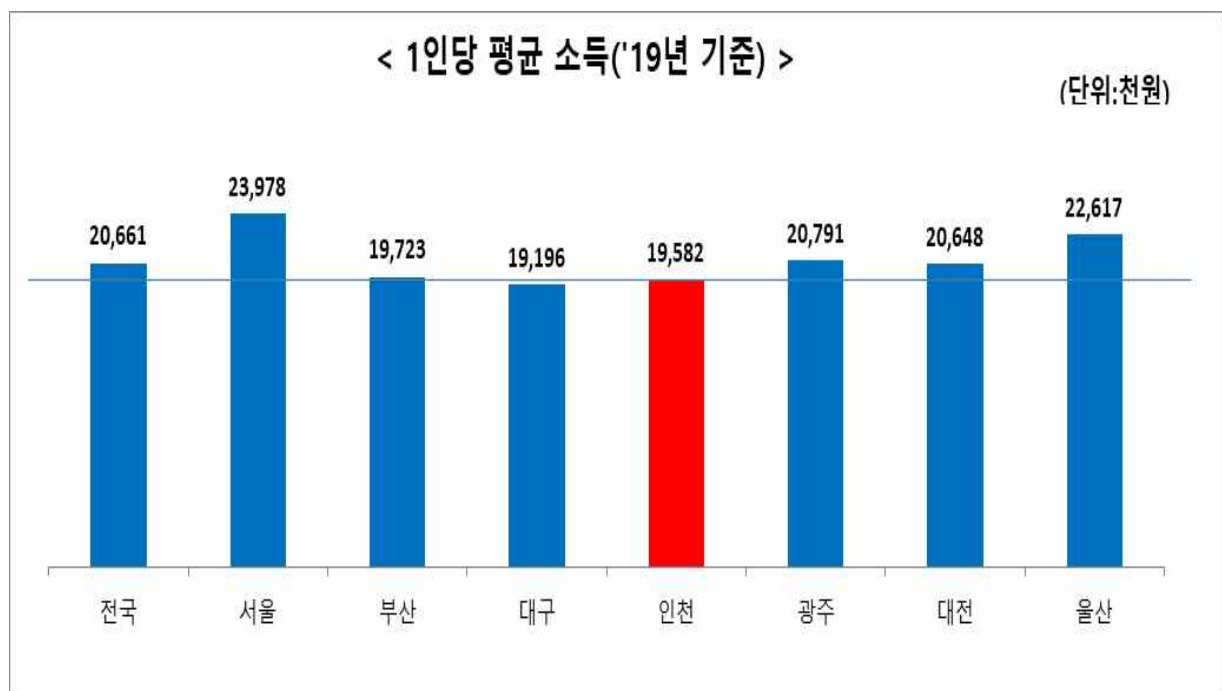
#### 4 [경제] 경제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 1970~80년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집중 육성되었던 인천 제조업의 노후화·영세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 현상 발생

< 인천 지역의 제조업 산출액 vs 부가가치 비중 >

	2000년	2010년	2018년
산출액 비중	57.2%	44.1%	40.5%
부가가치 비중	40.0%	28.6%	27.3%

- 낮은 부가가치는 낮은 소득으로 귀결되고, 지방 광역시에 비해서도 소득이 낮은 수준이나, 서울경기와 동일한 수도권 경제규제 적용



- 민선7기에서 인천형 뉴딜 등 경제구조 고도화 전략에 따라 첨단산업 중심 고부가가치 경제로 빠르게 전환중

\* 지역별 첨단산업 육성: ▲송도: 바이오 헬스, DNA(Data, Network, AI), ▲청라: 수소산업, 커넥티드카, 로봇, ▲영종: MRO, 관광/MICE, UAM, ▲옹진: PAV(특별자유화구역), 드론, 해상풍력 등

- ☞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기존 노후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수도권 규제 적용

## 5 [남북·국제협력] 남북 긴장완화 및 글로벌 선도도시

- 서해5도·강화도 등 접경지역 주민은 각종 개발·행위 제한, 남북관계 경색\* 시마다 불안감을 인내하고 있으나 충분한 보상·지원 부족\*\*

\* 연평도 포격('10.11월), 서해교전(제2연평해전, '02.6월) 등

\*\* '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당시 계획되었던 '20년까지 지원예산 9,109억원 중 실제 집행은 40%(3,900억원)에 그침

- 지방정부가 정부차원의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문화 협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 ☞ 낙후된 접경·도서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경제·문화 협력 기반 마련 필요

- 인천은 공항·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국제 기구를 유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FDI, '21.8월말 기준): 134억 2천4백만 달러(송도 75억 56백만, 영종 50억 98백만, 청라 7억 7천만)

- ☞ 인천이 글로벌 인재와 투자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 혁신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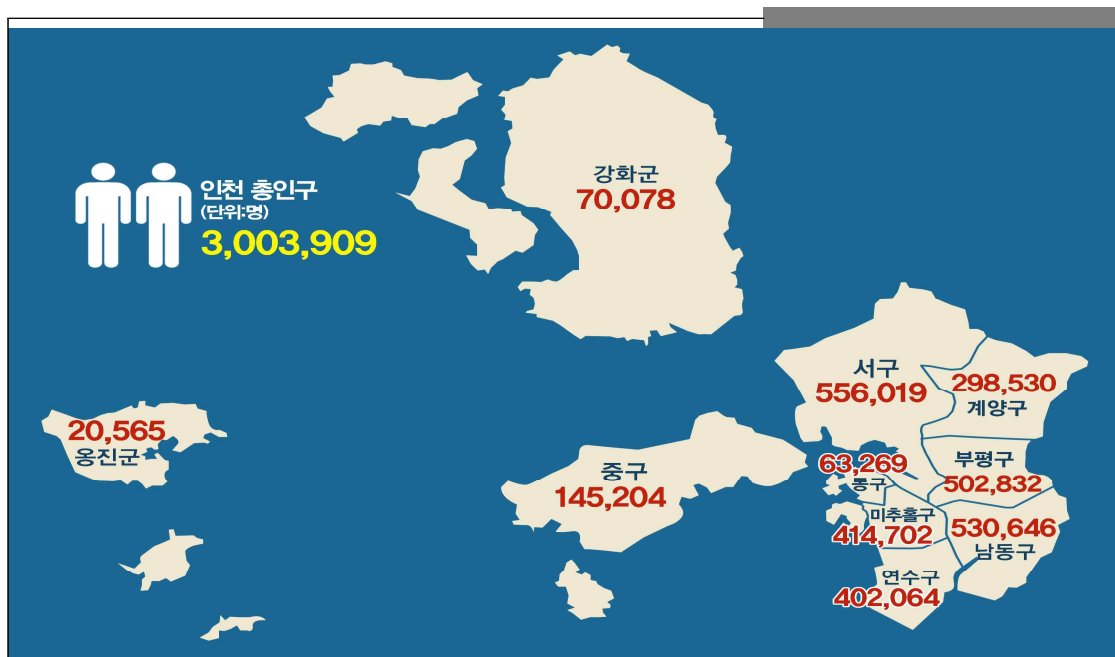
### 3

## 인천광역시 일반현황('21.8월 기준)

### 1 기본현황

- 인 구: 300만 3,909명(전국의 5.69%) \* 외국인 65,480명 포함
- 세 대: 1,286,458세대(세대당 2.3명)
- 면 적: 1,063.2km<sup>2</sup>(국토의 1.05%), 섬 168개(689.8km<sup>2</sup>)
- 행정구역: 2군, 8구(1읍, 19면, 135동)

#### < 군·구 인구 현황 >



### 2 조직 및 인력

- 인천시 : 1실 11국 3본부, 14직속기관, 1청, 18사업소, 1합의제행정기관 (자치경찰위원회)
  - \* 정원 : 7,350명 (본청 2,430, 직속기관 및 사업소 4,790, 시의회 106, 합의제행정기관 24)
- 자치군·구(10개): 정원 10,015명
  - \* 강화군 775, 옹진군 651, 중구 836, 동구 630, 미추홀구 1,198, 연수구 949, 남동구 1,284, 부평구 1,359, 계양구 943, 서구 1,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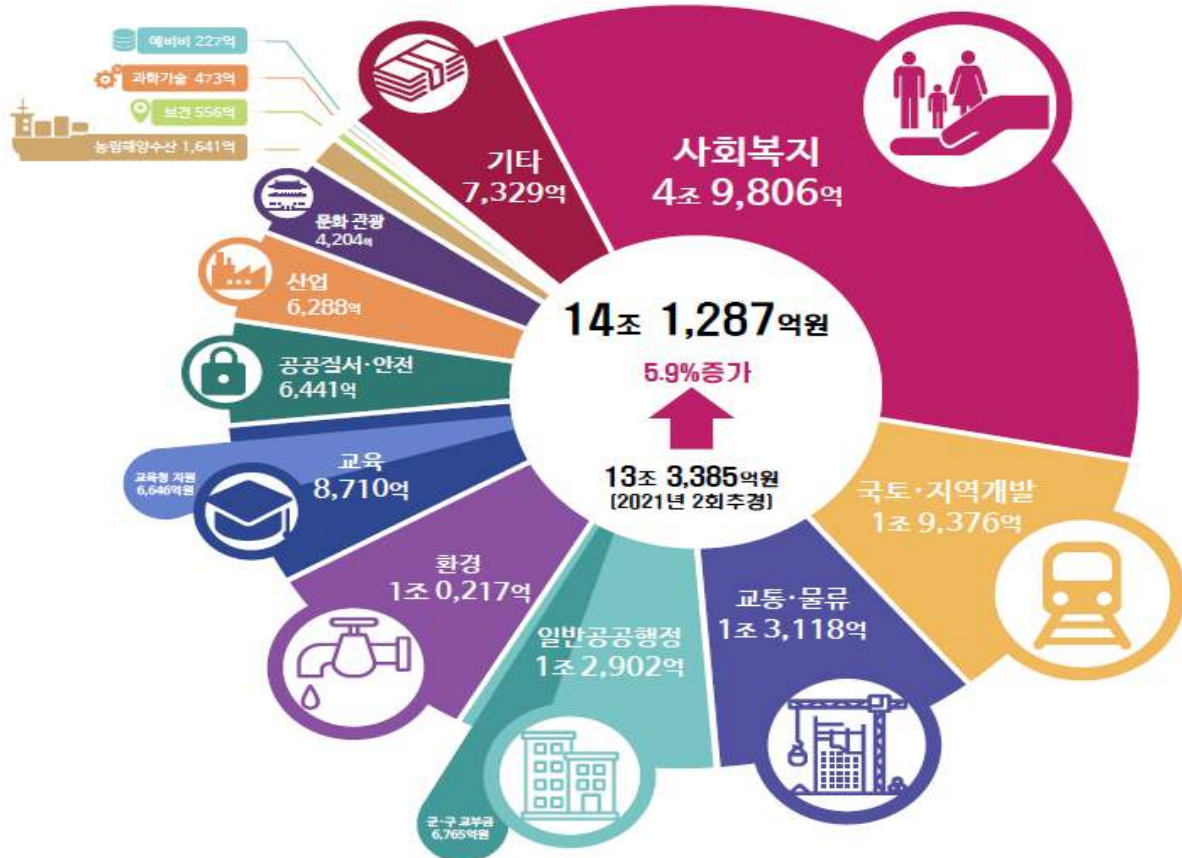
### ③ 경제규모

- 지역총생산(GRDP, '19년말): 90조 405억원(전국 7위, 특광역시 3위)
- 산업단지: 15개 산업단지, 11,692개 업체
- 외국인 직접투자(FDI, 2021. 8.31.기준): 4,848건, 289억 3백만 달러
  - \* 경제자유구역 : 134억 2천 4백만 달러(송도 75억 53백만, 영종 50억 96백만, 청라 7억 7천만)
- 경제활동인구: 1,632천명(취업 1,565, 실업 67)
  - \* 경제활동 참가율 63.7%, 고용률 61.9%, 실업률 2.8%

### ④ 2021년도 재정규모 (3회 추정 기준)

- 예산규모: 14조 1,287억원
  - 일반회계 10조 1,071억원, 특별회계 4조 217억원
    - \* 공사·공단 : 4조 8,045억원
- 기금운용규모: 15개 기금 1조 1,543억원

< 분야별 자원배분(시본청) >





## □ 분야별 주요공약 개요

- ▲환경(4개), ▲균형발전(5개), ▲교통·생활인프라(4개), ▲경제(5개), ▲남북·국제협력(2개)으로 5개 분야에 걸쳐 20대 과제를 선정

## &lt;1&gt; 환 경

- 환경피해와 자존심의 회복 -

- 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 ②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 ③ 아라뱃길 수변레저·관광 활성화
- ④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

## &lt;2&gt; 균형발전

- 신도시·원도심 간 상생 발전 -

- ⑤ 백령공항 건설 추진
- ⑥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 ⑦ 경인선 지하화
- ⑧ 내항 우선개방(1·8부두) 및 항만재생 추진
- ⑨ 인천에 필요한 정부기관 유치 및 존치

## &lt;3&gt; 교통 · 생활인프라

- 3백만 대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

- 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 (Y자) 완성
- ⑪ 제2경인선 조기 착공
- ⑫ 제4 경인고속도로 건설
- ⑬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
- \* 제2의료원, 감염병전문병원, 영종 국립대병원 분원 설립

## &lt;4&gt; 경 제

- 경제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 -

- ⑭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 ⑮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
- ⑯ 항공정비산업(MRO) 및 공항 경제권 육성
- ⑰ 산업단지 내 문화·여가 복합 공간 조성
- ⑱ 을왕산 영상클러스터 조성 지원

## &lt;5&gt; 남북 · 국제협력

- 긴장완화 및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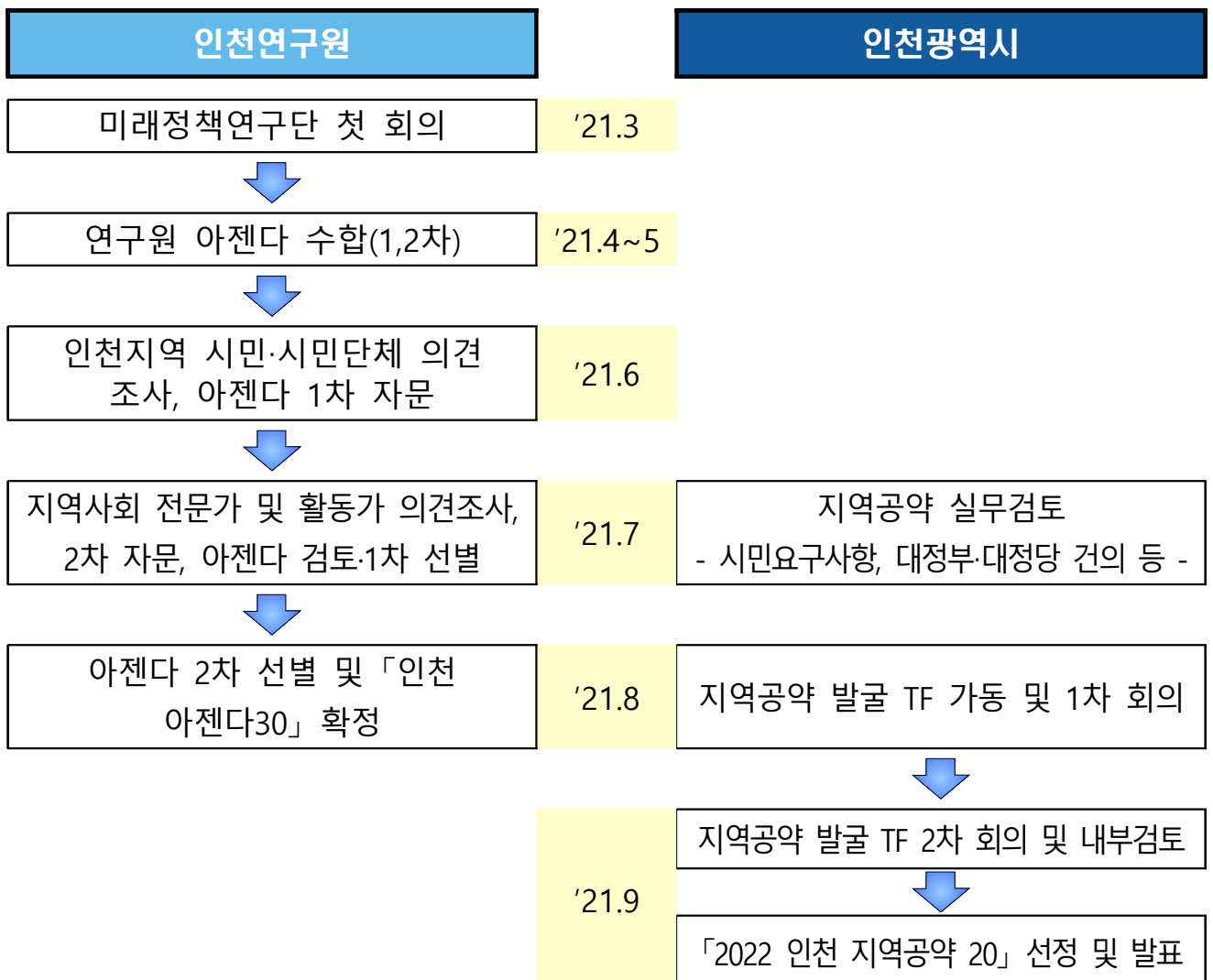
- ⑲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 \*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강화), 접경지역 초광역권 동서남북평화도로
- ⑳ 녹색기후기금 복합단지 (GCF Complex) 조성 지원



## 2

## 준비 과정

- 인천연구원은 '21.3월부터 '미래정책 연구단'을 구성하여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아젠다 발굴 시작
  - 인천연구원의 연구원 간 토론, 시민단체·전문가 자문, 일반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21.8월 「인천 아젠다 30」 확정
- 인천광역시는 '21.7월부터 실무검토와 관련 TF를 운영하여 '21.9월말 「2022 인천 지역공약 20」 선정·발표
  - 검토과정에서 인천연구원의 「인천 아젠다 30」, 그간의 시민청원 등 시민 요구사항, 대정부·대정당 건의사항 등을 모두 망라하여 폭넓게 검토



## 환경

## 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통해 30여 년 간 인천시민의 고통과 피해를 종식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환경정의 실현, 소각과 재활용 중심의 선진국형 자원순환 체계 도입

▶ 인천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재활용율 제고 노력 강화, 자원순환시설 건립,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등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추진중  
⇒ '21.5월 기준 인천시의 쓰레기 매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서울 12% 증가, 경기 16.5% 증가

- ☞ **[건의사항]** 특단의 자구노력 없는 수도권 매립지 추가 사용 주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종료기한을 확약

## ②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 인천 내륙에 유일하게 남은 8천년 역사의 염생습지와 갯벌을 국가도시공원화를 통해 제대로 보존하고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

\* '22. 3월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 예정(인천광역시 → 국토교통부)

▶(국가도시공원 지정) '21~'28년 /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 665만㎡ 내외  
▶(생태관광거점 육성) '24년 이후 / 소래습지생태공원~송도람사르습지 해안그린웨이(10km)

- ☞ **[건의사항]**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및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 일부 국비 지원 요청

\* 소요예산 : 약 5,921억 원 (국비 215, 시비 3,366, 비재정 2,340)

## ③ 아라뱃길 수변레저·관광 활성화

- 사실상 당초 건립 목적인 물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아라뱃길의 관광·레저 기능 강화 등 기능재정립\*으로 아라뱃길의 활성화 도모

\*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준비중('21.9. 환경부 등 중앙협의체)

- ☞ **[건의사항]** ① 아라뱃길의 주운 화물·물류기능을 축소하고 시민여가·친수 문화공간으로 조성
- ② 아라뱃길 주변 교통체계 개선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접근성 강화

#### ④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

- 인천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

\* 인천시에서 발전을 통해 생산한 에너지의 60%이상을 서울·경기에서 소비

※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발전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여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재정수요가 증가  
→ 다른 발전원 대비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낮은 세율을 적용

- ☞ **[건의사항]** ① 전력수급기본계획(제10차, 산업부)에 영흥화력 1·2호기의 2030년 조기 연료전환(석탄→LNG) 반영
- ②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0.3원→1원/kWh)을 통해 환경피해 회복 및 정의로운 전환 도모

### 균형발전

#### ⑤ 백령공항 건설 추진

- 백령·대청·소청도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관광 활성화, 해양영토 관리 지원을 위해 민·군 소형공항(50인승 항공기 운항) 건설 추진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254,000㎡, 76.8천평)  
▶(기간) 2016. ~ 2026.  
▶(규모) 50인승 민군 겸용 소형공항 건설(1,200×30m 활주로, 관제탑, 여객터미널 등)  
▶(총사업비) 1,740억원(B/C 2.19)

- ☞ **[건의사항]** ① 예비타당성조사(KDI) 조속 진행 및 국가재정운용계획('21~'25) 상 최우선 예산 배분(기재부)
- ②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반영 및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른 교통편의 증대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기재부)
- ③ 軍 비행제한구역과의 영향을 고려하여 입·출항 직진비행로 개설 및 직항로 불가시 우회 비행로 개설 협조(국방부)

## ⑥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 인천의 주요 원도심을 관통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완료 시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대로 및 연결도로의 지하도로 건설 추진('21~)

\*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금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반영

< 공단고가교~서인천IC >	< 문학IC~공단고가교 >
▶ 사업규모 : 6.55km, 4차로	▶ 사업규모 : 3.05km, 4차로
▶ 사업기간 : 2021.~2027.	▶ 사업기간 : 2026.~2030.
▶ 총사업비 : 5,790억원	▶ 총사업비 : 2,547억원

- ☞ **[건의사항]**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병행 추진\*에 따른 국비 조기 지원

\* 상부 :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하부 : 지하도로 건설(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 ② 남북측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문학IC~공단고가교 구간 혼잡도로 개선계획 추가 반영

## ⑦ 경인선 지하화

- 약 120년간 지상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경인선으로 인한 주변지역 쇠퇴, 도로 네트워크 단절, 교통혼잡 등을 치유하고, 타 교통망 확충\*으로 축소된 경인선의 기능을 반영하여 철도운영 효율화 제고

▶ (구 간) 인천역~구로역(27km, 21개역)
※ 인천구간 : 부개역~인천역(13.97km, 11개 역사)
▶ (총사업비) 9조 1,228억원(복선으로 추진 시 5조 5,805억원)

\* 인천1호선(1999년 개통), 인천2호선(2016년 개통), 서울7호선 석남 연장(2021년 개통) 청라 연장(2027년 개통 예정), GTX-B(2027년 개통 예정), 제2경인선(예타 중)

- ☞ **[건의사항]** ①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주도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추진전략 수립

- ②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재원지원·타당성확보 및 통합 개발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

## ⑧ 내항 우선개방(1·8부두) 및 항만재생 추진

- 인천내항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침체 가속화와 정부 부처와의 이견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내항의 우선 개방 및 조속한 항만 재생 추진

\* 26,682천RT('16년) → 20,854천RT('19년)

※ 재생사업 착공 전까지 내항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우선 개방함으로써 내항 재생 추진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수변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원도심 균형발전의 동력을 강화하고 항만재생사업 신속한 추진의 지렛대로 기능

☞ **[건의사항]** ① 시민 친수공간 확대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내항 우선개방(1·8부두)

② 성공적인 항만재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비 및 신속한 절차 이행 협조

※ 예타·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조속이행, 국비 691억원 지원, 1·8부두의 사업구역 확대

## ⑨ 인천에 필요한 정부기관 유치 및 존치

-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존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

\*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등은 수도권 매립지, 공항·항만 등 인천의 관련 인프라·산업기반과 연계되어 설치된 것

☞ **[건의사항]**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 기계적 균형논리나 비수도권 득표 가능성보다는 지역특성과 자원과의 상승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천지역 3개 공공기관 존치

\* 한국환경공단, 항공기술원, 극지연구소 인천 존치

## 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Y자) 완성

- 수도권 주요 거점 간 30분대 연결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서울 도심 집중도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Top3 허브 공항으로의 도약을 위해 GTX-D Y자 노선 완성

- ▶(사업구간) 김포~검단~계양 > 부천종합운동장~삼성~하남  
인천공항~청라~가정
- ▶(사업규모) L=110.27km, 정거장 18개소, 차량기지 2개소
- ▶(총사업비) 10조 781억원

- ☞ **[건의사항]** ①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 신속 추진
- ② GTX-D Y자 완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부천종합운동장~삼성~하남 노선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 ⑪ 제2경인선 조기 착공

- 연수구 청학 및 남동구 논현·도림·서창 등 인천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향상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제2경인선 건설('18.~'28.)

- ▶(사업구간) 선학~신연수~인천논현~도림사거리~서창2지구~신천~은계~옥길~광명
- ▶(사업규모) 연장 20.63km, 정거장 8개소
- ▶(총사업비) 1조 3,361억원

- ☞ **[건의사항]** 신속한 예타 통과('19.8.~ 예타착수) 및 관련절차 신속 이행을 통한 2024년 조기착공 요청

## ⑫ 제4 경인고속도로 건설

- 인천의 동서축 고속도로인 제1·2·3 경인고속도로의 지·정체 해소 및 원도심 주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서구 가좌~경기 부천~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제4 경인고속도로 건설

- ▶(사업구간) 인천시 서구 가좌동(가좌C)~서울 여의도
- ▶(사업규모) 26km, 양방향 2~4차로, 대심도 터널 (인천 8.3km, 서울 12.2km, 경기 5.5km)
- ▶(총사업비) 2조 1,000억원

☞ **[건의사항]** ① 민자적격성 검토 등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

② 3개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감안하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 상 광역도로 반영

### 13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

- 인천지역은 전국평균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과 병상수가 낮은 수준\*이며, 공항과 항만을 통한 신종 감염병의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가 필요

\* 공공의료기관 비중('19년 기준): 4.1%(전국5.5%) / 공공의료기관 병상: 인구1천명당 4.5%(전국9.7%)

※ 인천은 국립대학병원이 부재한 상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유입된 재난이 국가재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재난 의료시설」 구축 필요

☞ **[건의사항]** ① 인천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선정 및 국비 지원(409억원)

② 제2의료원의 조속 추진을 위한 예타면제 및 국비한도액(165억) 확대

③ 국립대학병원 인천분원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 경 제

### 14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 우리나라 백신주권 등 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유일의 바이오 산학연병이 집적된 송도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추진

☞ **[건의사항]** ① 인천에 백신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지정('22~)

②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23~)

③ 신속한 예타 추진을 통한 'K-바이오 랩허브' 조기 구축('21~'25)

④ 뷰티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22~'26)



## ⑮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

- 인천은 대규모 수소생산 기반과 항만·공항 및 수도권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등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여건을 보유

### ※ 사업개요

- ▶(위치) 인천 서구(SK인천석유화학, 검단2산업단지, 청라국제도시 등)
- ▶(기간) '23~'27(5년)
- ▶(규모) 수소 생산 연간 약 3만톤, 수소기업집적단지 및 연구시설 구축
- ▶(총사업비) 2,402.7억원(국비 1,171.9, 시비 537.1, 민자 693.7억원)

- ☞ **[건의사항]** 탄소중립 가속화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사업예산 지원 요청

## ⑯ 항공정비산업(MRO) 및 공항경제권 육성

-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발전한 항공정비산업(MRO)의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항경제권 개발

\*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1.8.) : 인천→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 등  
사천→기체중정비·군수

- ☞ **[건의사항]** 인천지역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3대 기반 6대 과제>

3대 기반	6대 과제
교육훈련기반	①항공우주 마이스터 고교 설립(~'25.), ②항공산업 통합교육 훈련센터 구축('22.)
기업지원기반	③영종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22.~'29.), ④항공산업 공용 기술장비 지원센터 설립('22.~'26.)
미래산업기반	⑤도심항공교통 시험·평가 지원센터 구축('22.~'26.), ⑥도심항공교통 인증센터 구축('22.)



## ⑪ 산업단지 내 문화·여가 복합공간 조성

- 노후산단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을 위해 산단을 문화예술 소비 및 상업공간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내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22.~'28.)

▶(사업기간) 2022. ~ 2028.

▶(총사업비) 3,919억원(국 584 시 160 민 3,175) 계획

▶(사업내용) 뷰티 미용 등 소비재 브랜드 문화체험공간 조성, 지하철 역 등에 복합 문화체험 공간 조성, 남동 제1·2유수지를 활용한 생태 문화체험공간 조성

☞ **[건의사항]** ▲대규모 재원 투자를 위한 국비 지원, ▲산단 랜드마크(벤처·창업·소공인 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인천중소벤처기업청 부지 이전

## ⑫ 을왕산 영상클러스터 조성 지원

- 한류콘텐츠와 영상산업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글로벌 콘텐츠산업 선점을 위해 수도권 등 대규모 배후시장과 공항 인프라를 갖춘 을왕산 지역을 글로벌 복합영상산업클러스터로 조성('21.~'27.)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77-4번지 일원(규모 807,733㎡, 24.4만 평)

▶(기간) 토지조성 '21 ~ '24년 / 시설개발 '25 ~ '27년 / 운영 '28년 ~

▶(사업비) 2조1천억 원(토지조성 2,300억 원 + 시설개발 18,700억 원)

▶(사업내용) 4차 산업혁명 기술보유 국내외 혁신기업 유치·투자·지원, 첨단 디지털 산업 R&D 지식집적단지 조성 및 국내외 영상전문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 **[건의사항]** 영종국제도시 을왕산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및 차세대콘텐츠 개발 등 영상클러스터 조성 지원

## 남북·국제협력

## ⑬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 (서해평화도로) 남북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영종과 강화를 연결(향후 개성·해주까지 연계)하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위치) 인천 영종(인천공항)~웅진(신도)~강화(길상,하점) ⇒ 장래 개성·해주

▶(사업규모) L=35.5km(2~4차로), 도로등급(국도 또는 국지도)

- (1공구) 영종~신도 3.2km, (2공구) 신도~강화(길상) 11.4km, (3공구) 강화(길상~하점) 20.9km

▶(총사업비) 13,069억원(영종~신도 확장 1,090억/ 신도~강화 5,483억/ 길상~하점 6,496억)

- (동서남북평화도로) 접경지역 교통물류 및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동서남북평화도로 건설

- ▶(위치) 인천(영종, 옹진, 강화)~경기(김포, 파주)~강원(화천, 고성·속초)
- ▶(사업규모) 단절구간 신설·개량 86.3km(2~4차로), 도로등급(국도 또는 지방도)
  - 인천 38.3km, 경기 27.2km, 강원 20.8km
- ▶(총사업비) 13,273억원(인천 5,057억/ 경기 3,124억/ 강원 5,092억)

## ☞ [건의사항] ① 서해남북평화도로 영종~강화 구간의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 및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6~’30)’ 또는 ‘제6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26~’30)’

## ② 동서남북평화도로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 반영

\* 국가간선도로망 동서10축(인천 강화~강원 간성, 211.5km) 시점 변경(강화→인천공항) 및 영종~강화(35.5km)간 연결 우선 추진

## ② 녹색기후기금 복합단지(GCF Complex) 조성 지원

- 국제회의장 등 전용공간 확보,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공간 마련, 기후변화 관련 주요기관 집적화를 위한 GCF Complex 조성(’22.~’28.)

- ▶(위치/규모) 인천 연수구 송도동 24-1,2,3 / 연면적 90,000㎡(지상 33층, 지하 3층)
- ▶(사업비) 2,634억원 (인천시 부지제공 140억원 포함)
- ▶(기능) GCF 등 기후관련 국제기구, 국제인증기구, 비즈니스 컨설팅 집적화, GCF 투자사업 관련 국가간·국제기구 간 국제비즈니스 공간 마련
- \* 주요기구: GCF, GGGI, CTCN아태사무소, GTC, MDB(다자개발은행)

## ☞ [건의사항] 국비 지원 및 국제기구의 ‘공공청사’ 또는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석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관련국비 지원 요청

###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면제사업) ①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2022 인천 지역공약 20선 상세본

분야	정책/사업명	쪽수
<1> 환경	❶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21
	❷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25
	❸ 아라뱃길 수변레저·관광 활성화	29
	❹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	32
<2> 균형발전	❺ 백령공항 건설 추진	35
	❻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37
	❼ 경인선 지하화	40
	❽ 내항 우선개방(1·8부두) 및 항만재생 추진	44
	❾ 인천에 필요한 정부기관 유치 및 존치	50
<3> 교통·인프라	❿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 (Y자) 완성	54
	⓫ 제2경인선 조기 착공	58
	⓬ 제4 경인고속도로 건설	61
	⓭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	64
<4> 경제	⓮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68
	⓯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	72
	⓰ 항공정비산업(MRO) 및 공항경제권 육성	74
	⓱ 산업단지 내 문화·여가 복합공간 조성	76
	⓲ 을왕산 영상클러스터 조성 지원	82
<5> 남북국제협력	⓳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88
	⓴ 녹색기후기금 복합단지(GCF Complex) 조성 지원	95



# 1

## [환경] 환경피해와 자존심의 회복 (4개)

### 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 1 그간의 역사

-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 처리목적으로 대통령재가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1992년 폐기물 반입개시(1매립장 사용)

\* 부지현황

구분	1매립장	2매립장	3매립장	4매립장	기타
총면적(1,600만)㎡	409만㎡	378만㎡	307만㎡	389만㎡	117㎡

\* 2015년 4자합의에 의해 현재 3-1매립장(103만㎡) 사용중

####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2015.6.28.) 〉

- ▶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중략)...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중략)...
- ▶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매립으로 인한 비산 먼지·악취·침출수발생 등 주변지역 환경 악화

\* 청라지역 대규모 악취발생, 침출수로 인한 어민 피해배상, 사월마을 사태 등

- 4자 합의에 따라 공동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고자 두 차례 공모(21.1월~4월 /~7월)하였으나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음

\* 법정지원 외 2,500억원 특별지원금 등 혜택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상매립의 넘비 시설 이유로 신청 기피

#### 2 필요성

- 30여 년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인천시민의 고통과 피해 종식
  - 매립지 주변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난립, 악취 및 침출수로 주민 피해



○ 주변지역(청라·검단신도시) 인구증가 및 신산업 시설 입지 등 도시개발 확대



○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한 환경정의 실현

- 3개 광역지자체의 쓰레기가 한 지역에 매립되는 정책은 불공정·불평등하며, ‘도덕적 해이’로 쓰레기 양을 늘리는 결과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범시행에 따른 지자체별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 (2021.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단계적 반입금지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 정책 변화

○ 선진국형 자원순환체계 도입

- 인천시는 후진국형 쓰레기 직매립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쓰레기발생량 감축, 폐자원의 자원재활용 확대, 자체매립지 조성(영흥에코랜드)으로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구축 중
- 향후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자원순환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정부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델 제공 가능

### 3 주요 사업·정책 내용

① 인천시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통한 자구노력 강화

○ 쓰레기 독립 선언(‘20.10.15)

-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

- ▶수도권매립지 종료 당위성 및 시민의 관심과 지지 요청
- ▶생활폐기물 감축, 1회용품 감소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추진
- ▶생활·중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위한 자원순환시설 건립 추진 계획 발표
-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 발표

## ○ 쓰레기 자립 선언(‘20.11.12)

-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기본 추진 구상 발표

-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 건설 계획
- ▶하수슬러지 자원순환센터 건설 계획
-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가칭’ 인천에코랜드) 계획
- ▶자원환경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

## ○ 친환경 특별섬(영흥도) 선언(‘21.3.4)

- 친환경 자체매립시설 ‘인천에코랜드’ 조성 부지 확정

- ▶매립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영흥도 ‘인천에코랜드’ 조성 세부 추진계획 및 건립·운영방안

## ②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4자간 쟁점 대두

### ○ 대체매립지 공모실패 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추가사용에 대한 이견

- (인천시) 친환경자원순환시설(소각장, 매립장) 설치로 자체 폐기물 처리정책 추진 가능 →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 ▶ 2015.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본질
- ▶ 4자합의사항(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 선제적 조치 이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서조항만 인용은 부적절

- (환경부·서울시·경기도) 공모이후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단서조항 적용

\* 잔여부지 중(106만<sup>m</sup>2 범위 내)추가 매립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

## ④ 기대효과

### ○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및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환경정의 실현

- 매립종료로 인한 주민반발 최소화와 인천시민의 일방적 환경피해 종식
- 폐기물 감량, 재활용, 자원화 등 자체 폐기물처리정책 추진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모델 및 친환경 녹색도시로의 입지 구축
  - 폐기물발생부터 처리까지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모델 제시
  - 자원순환정책의 성공적 기반으로 친환경녹색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 5 건의사항

### ☞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실질적 사용종료' 협약

(사용연장 없는 명확한 종료시점 명기) 환경부 및 국회 등의 중재나 협의를 통해 4자간 매립지 추가 사용 논란 불식을 위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기한 명기

### ☞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지자체별 소각·매립시설 확충

(자체 폐기물처리정책 강화 추진 유도) 폐기물 발생부터 분리, 소각, 매립에 이르기까지 폐기물의 지역별 자체처리를 위한 시설 조성 정책 및 제도개선 강화 필요

인 천 광 역 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 추진단장	서 재 희	032-440-5661	매립종료팀장	김 은 진	032-440-8271
-----------	--------------------	-------	--------------	--------	-------	--------------



## ②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 ① 그간의 역사

- 인천의 도시성장 과정에서 대부분 갯벌은 간척과 매립으로 상실되었으나, 소래습지는 유일하게 남은 염생습지

\* 8천년 이상 형성 역사를 가진 갯벌과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행성 갯골



- 주변 지역이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되고, 레미콘 공장 등이 입주(1990년대~) 하여 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가 있는 상황

\* 최근 레미콘 공장부지에 대형 물류창고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물류창고 반대 서명운동 및 국민신문고 등 폭발적인 민원 발생

### ② 필요성

- 인천 내륙의 유일한 염생(鹽生)습지 보존과 갯벌 훼손 방지
  - 대형 물류창고 등 개발 위협, 주변 교통량 및 주거지의 인구 증가 등으로 갯벌훼손이 가속화되어 갯벌 보전대책 시급
  - 갯벌매립으로 해수 유입량 감소 → 염생습지의 감소 및 육상화 증가
- 갯벌의 훼손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현상 중단
  - 천연기념물 저어새, 흰발농게 등 멸종위기 생물 790여종의 서식처 감소
  - 도요물떼새, 저어새 등의 중요한 경유지인 송도갯벌의 매립으로 서식지 면적이 크게 감소

- 주변 택지개발로 인근 주민의 공원서비스 수요 지속적 증가

\* 관련지역 : 남동구 (현재인구 519천명 → 계획인구 560천명)  
연수구 (현재인구 390천명 → 계획인구 460천명)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① 소래지역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 '22.)

##### < 사업개요 >

- 위 치: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7일원)
- 지정면적: 665만㎡ 내외 (지정기준 : 300만㎡ 이상의 도시공원)
  - 1단계(단독추진) 소래 ~ 송도 람사르습지 / 665만㎡
  - 2단계(공동추진) 소래 ~ 송도 람사르습지 + 시흥 갯골생태공원 / 824만㎡
- 기 간: 2021. ~ 2028. (단계별 시행)
- 소요예산: 5,921억원 (국비 215, 시비 3,366, 비재정 2,340)
  - \* 5,921억원 (재정 3,581억원 + 비재정 2,340억원) / G.B훼손지복구사업 등 비재정사업을 우선 추진

#### ②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로 조성 및 운영 ('24.~ 단계별 추진)

##### < 추진목표 >



**“소래습지생태공원~송도람사르습지 약 10km의 해안 그린웨이”**

##### < 단계별 계획 >

기	본	구	상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반영</li><li>○ 기본구상 용역 착수 (~'23. 9.)</li></ul>				
↓									
도	시	관	리	계	획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li><li>○ 국제 아이디어 공모</li></ul>		
↓									
신				청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천시 → 국토교통부</li><li>○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li></ul>			
↓									
국	가	도	시	공	원	지	정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토교통부 → 인천시</li></ul>
↓									
공	원	조	성	운	영	2024.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계별 공원조성 및 국가도시공원 운영</li></ul>		

#### 4 기대효과

-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국민청원 등 지역민원 해소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유산의 보전 및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
- 소래지역의 습지경관 등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정부와 지역의 거버넌스를 통한 국가적인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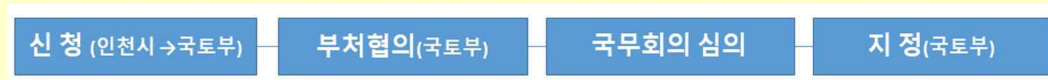
#### 5 건의사항

☞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수도권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① (국가도시공원 지정)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요청

※ '22. 3.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 예정(인천시 → 국토교통부)

<지정절차>



- ②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후 재정지원)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 일부 국비 지원

※ 소요예산 : 5,921억 원 (국비 215\*, 시비 3,366, 비재정 2,340\*\*)

\* 국가도시공원 지정 후 공원시설 설치비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 예정임

인 천 광 역 시	공 원 조 성 과 장	유 광 조	032-440-5066	공 원 기 획 팀 장	최 윤 오	032-458-7031
-----------	-------------	-------	--------------	-------------	-------	--------------



## 참고

## 소래습지 주변 시설 및 상황





## ③아라뱃길 수변레저 · 관광 활성화

### 1 그간의 역사

- (사업결정~개통) 아라뱃길은 상습 침수지역인 굴포천 유역(인천 계양·부평, 경기 부천·김포)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인운하사업(95년)으로 공사 시작
  - 국가정책조정회의('08년)에서 굴포천 방수 사업을 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12년 개통
- (개통 이후) 아라뱃길 사업은 경제성, 환경성 등 검증 미흡과 환경훼손, 접근성 단절로 지역적 갈등을 초래하고 물류기능 성과도 미흡
  - 아라뱃길 개통 후, 여의도 ~ 덕적도 간 여객선 운항을 개시하였으나 서울시 선박운항 허가 보류에 따라 운행 중단
    - \* 시간·운송비 등에서 육상물류보다 효율성 낮음('19년 주운수로 계획대비 실적 화물 8.1%, 여객 20.7%)
    - \* 소형 여객선 운항('12.5~'14.7, 이용객 7,117명) (37톤급, 이용률 77%)
    - \* 서울시는 안전성(선착장, 항로 및 해도)과 환경(밤섬피해) 문제 등 이유로 불허
- (시설물 관리권이관 및 후속논의) 인천시 기반시설 인수인계 완료('20.12.)
  - \* 도로24km, 교량6개소, 펌프장3개소, 주차장18개소, 수로1개소, 조경23.4만㎡
  - 경인 아라뱃길 공론회 위원회의 기능개선 권고문 환경부 전달('21.2.)

- ▶(물류·여객) 주운기능 축소, 화물수송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폐지 검토
    - ▶(하천·환경) 현 4~5등급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문화·관광)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 ☞ 중앙기관,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된 시나리오 워크숍(관계기관) 3회, 시민위원회(서구, 부평, 계양, 김포, 부천 주민 100여명) 3회로 최적대안 도출
    - 현재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주 준비 중('21.9.)
      - \* 중앙협의체(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k-water) 구성·협의하여 용역 추진방향 검토 중

## 2 필요성

- 수도권 시민 친수공간으로 방문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수상 레저 등 방문객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

- \* 방문객 현황 ('16.) 6,020천명 ('18.) 6,721천명 ('19.) 5,965천명 ('20.) 5,110천명
- \* 수영 등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생활환경기준 3등급 이상의 수질 개선

- 수변공간이 가지는 잠재력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 인천터미널, 수도권 매립지 등 유희공간과 연계한 미래 성장기반 제공
- \* 검암역, 계양역 등 역세권 중심의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 경인 아라뱃길 ~ 한강 뱃길 연계 및 유람선 운항 등을 통한 해상교통·관광인프라 조성

- \* 서해~한강 뱃길 연결 선호도 설문조사 시 서울시민 72%가 찬성('15.3, 서울시)
- \* 아라뱃길 재방문 의사가 높음 : 방문만족도 3.79점, 재방문의사 91.8%('16, 인천연구원)

## 3 주요 사업·정책 내용

### < 경인아라뱃길 현황 >

- 구 간 : 인천시 서구 오류동(서해)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 기간/비용 : 2009년~2015년, 2조 6,759억 원
- 주요시설
  - 주운수로 : 18km(폭 80m, 수심 6.3m) 횡단교량 6개소 \* 14.2km는 홍수 시 방수로로 사용
  - 항 만 : (인천) 144만 m<sup>2</sup>, 갑문 2기 / (김포) 86만 m<sup>2</sup>, 갑문 1기
  - 물류단지 : (인천) 115만 m<sup>2</sup> / (김포) 89.4만 m<sup>2</sup>

- ① (세부실행 계획 수립) 국가차원의 기능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우리시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친수공간 조성) 시천가람터 등 방문객 유인을 위한 문화·체험 인프라 구축
- (주변지역 연계) 수도권 매립지, 검단지구, 검암역, 계양역 등 역세권 중심의 복합공간 조성
- (접근성 향상) 보행·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아라뱃길 접근성 향상

② (아라뱃길~한강 뱃길 개통) 환경부, 서울시,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 사회적 합의점 도출을 위한 지속 노력

③ (수변레저·관광 기능 강화)

- 자전거도로의 단절 해소: 아라인천터미널 갑문시설(약250m), 보세창고·공장 구간(약880m)
- 수변·레저스포츠 활성화: 가족형 수상택시, 자전거-캠핑-수상레포츠 활동 등

④ 아라뱃길 3거점별 창조프로젝트 추진

- 아라인천터미널: (가칭)Ara 워터프론트 크리에이티브 파크 조성
  -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창조적 공간의 테스트베드
- 시천나루 : (가칭)Ara 마켓플레이스 조성
  - 문화예술이벤트 개최장소로 활용(예술벼룩 시장 등)
- 굴현나루 : (가칭)Ara 바이크파크 조성
  - 자전거 관련 교육, 체험, 판매·수리 기능 연계

4 기대효과

- 수도권 매립지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인천 북부권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아라뱃길 ~ 한강 유람선 운항으로 해상관광·교통 기능을 수행하고, 수상 관광 활성화와 향후 서해 섬까지 운항노선 확대를 통해 관광 활성화 도모
  - \* 관광 상품과 연계한 편의성·안정성을 갖춘 서해 섬 운항 노선 확대 시 해양관광 수요, 수산물 운송루트 활용 기대

5 건의사항

☞ 아라뱃길을 시민여가·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주 기능 조정(물류→레저), 교통체계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도적·물적 지원 강화

인 천 광 역 시	해 양 항 만 과 장	임 현 택	032-440-5051	해 양 산 업 팀 장	나 민 환	032-440-4846
	해 양 친 수 과 장	이 한 남	032-440-5672	친수공간시설팀장	권 순 광	032-440-7156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신	032-440-5037	관광시설개발팀장	문 윤 구	032-440-4061

## ④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

### 1 그간의 역사

- 정부는 '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까지 '18년 대비 35%이상 감축하는 목표(NDC) 설정
  - ※ 2050 탄소중립 선언에는 실행계획으로 석탄발전 완전중단 포함
- 이에 인천시는 탄소중립 공동선언('20.7.), 탈석탄 동맹(PPCA) 가입('20.11.), 석탄화력발전 조기폐쇄('20.11.) 추진
- '20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의 2030년 조기 폐쇄를 2회에 걸쳐 산업부에 건의하였으나 미반영
  -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 12.)에 영흥화력 1, 2호기의 2034년 LNG전환 반영

### 2 필요성

- EU 및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 적용에 따라 수출의존도 및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부담완화
  - \* 수입물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자국(역내) 기업과 차별화된 세금을 부과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 '18년 기준 영흥화력 1·2호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0.1백만톤CO<sub>2</sub>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254.7백만톤CO<sub>2</sub> 대비 4%차지
  - ⇒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35%이상 감축)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쇄 필수
- 영흥화력 1·2호기 조기폐쇄로 수도권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도권 배출량의 3.7%, 인천의 15.3%('18년 기준)
  - 대기오염물질(SOx, NOx)은 수도권 배출량의 1.4%, 인천의 7.3%('18년 기준)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1 시민, 환경단체와 연대를 통한 조기폐쇄 공동추진

- 공감대 조성을 위해 조기폐쇄 필요성 및 에너지전환 정책 대시민 홍보
  - ※ 홍보방안 : 보도자료, 유튜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 추진
- 시민, 환경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개최 및 국민청원 등 추진
  - ※ 자연스러운 에너지전환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고자 유연탄의 세금 인상(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비상저감조치, 배출권 구매비용의 상향조정 대정부 요구 추진
- 탄소세 등 새로운 세목 개발을 대체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재원 마련

####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

- 화력발전은 악취, 분진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사회적 복구비용\* 발생
    - \* 발전부문 대기오염 피해 연 22.9조 중 화력 17.2조('16년 경기연구원)
  -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 대비 피해가 크에도 낮은 세율 적용하고 있어 세율인상\* 필요
    - \*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 원자력발전 1원/kWh, 화력발전 0.3원/kWh
- ⇒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원자력발전 수준)

#### 2 정의로운 전환 및 지역사회 지원전략 마련

-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종합지원대책 수립 중
-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적 지원모델 도출

#### <영흥화력발전소 직·간접 고용현황>

총고용(명)	직접고용(명)			간접고용(명)		
	소계	지역 내 거주	지역 외 거주	소계	지역 내 거주	지역 외 거주
1,727	657	웅진군 151 인천시 58	448	1,070	338	732

### ③ 안정적인 전력수급 도모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조속한 확대로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 실현

#### < 사업개요 >

- 사업위치 : 인천 용유·무의·자월도 및 덕적도 해상 등
- 사업기간 : 2020. ~ 2030.
- 사업규모 : 3,673MW/18.5조원(민간투자사업)

구 분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 코리아	C&I레저산업(주)	OW 코리아
발전용량/사업비	640MW / 3.2조원	1,600MW / 8조원	233MW / 1.3조원	1,200MW / 6조원
사업위치	용유·무의·자월도 덕적해상	덕적 해상	굴업도 주변 해상	덕적도 외해
준공시기	'25. 5.	'27년 말	'30년 이전	'30년 이전

### ④ 기대효과

- 조기전환(석탄→LNG)으로 4년간 온실가스 16백만톤CO<sub>2</sub> 감축  
※ 소나무 113백만 그루 식재 효과(식재면적 889km<sup>2</sup>로 여의도면적의 370배 규모)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2050 탄소중립, 탈석탄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으로 국제관계 신뢰 구축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 ⑤ 건의사항

-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흥화력 1·2호기 2030년 조기폐쇄 반영 및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 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12월 예정)에 영흥화력 1·2호기 조기폐쇄 반영)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흥화력 1·2호기의 2030년 조기 연료전환 반영(석탄→LNG)

#### ②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지방세법에 따른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대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

인 천 광 역 시	에너지정책과장	유 준 호	032-440-5023	해상풍력TF팀장	유 강 환	032-458-7136
-----------	---------	-------	--------------	----------	-------	--------------

**⑥ 백령공항 건설 추진****1 그간의 역사**

- (타당성 검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16.5.)되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17.11) 결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B/C값 2.19) 되었으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미선정('20. 5월, 12월 / 기재부)
  - \* (사유) 국토부가 진행 중인 6개 지방공항 개발사업의 부진 및 운영 중인 지방공항 대부분이 적자상태에서 소형공항 운송환경이 미조성 되었다는 점
- (당위성 확보 노력) 백령공항 예타 대응 연구용역(인천시, 옹진군)을 통해 예타심의 쟁점 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및 정책논리를 개발하여 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타당성 확보

**2 필요성**

- (정주여건 개선) 결항이 잦고 선박에만 의존하는 백령도의 교통 접근성 제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
  - \* 인천항에서 선박으로 4~5시간 소요(결항률 18%, 지연률 11% 이상), 전국 유일 야간운항 통제
- (해양주권 확보) 서해5도 수역 남한·북한·중국과 중첩되어 국제법상 지위 논란에 따른 해양주권 수호 및 평화지대 조성 시급
  - \* 서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동경 123~124도 경계 중국 항공모함 등 작전 증가
- (1일 생활권 보장) 야간운항(일몰 후~일몰 전) 통제 및 기상악화로 인한 여객선 결항 또는 지연운항에 따른 국민생활 불편 해소
  - \* 병원 진료, 군장병 외출·면회 등에 최소 2~3일이 소요되어 생활 불편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민 · 군 소형공항(50인승 항공기 운항)을 건설하여 교통불편 해소 및 관광 수요 견인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영토관리 지원

#### < 사업개요 >

-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254,000㎡, 76.8천평)
- 기간 : 2016. ~ 2026.
- 규모 : 50인승 민군 겸용 소형공항 건설(1,200×30m 활주로, 관제탑, 여객터미널 등)
- 총사업비 : 1,740억원(B/C 2.19)

### 4 기대효과

- 백령 · 대청 · 소청도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이동권 보장)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
-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5 건의사항

☞ 서해 서북단 도서주민들의 생활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① 예타 평가(KDI) 조속 진행 및 국가재정운용계획('21~'25) 상 최우선 예산 배분 (기재부)
- ②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반영 및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른 교통편익 증대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국토부)
- ③ 軍 비행제한구역과의 영향을 고려하여 입·출항 직진비행로 개설 및 직항로 불가시 우회 비행로 개설 협조 (국방부)

## ⑥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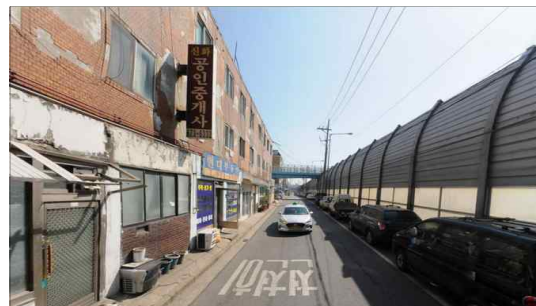
### ① 그간의 역사

- 1968년 대한민국 최초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의 물동량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산업·교통의 중추역할 수행
-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팽창으로 현재는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었으며, 교통 소음과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로 원도심 슬럼화 가속
- 50여 년간 고속도로로 인해 고통 받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 중
  -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추진

### ② 필요성

-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지하도로 건설 불가피

\* 50여 년간 주민 고통(소음, 매연, 도심단절 등) 감안,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



※ 관련지역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21~)

-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제한속도 하향, 교차로 설치로 인한 신호대기 등으로 교통 혼잡 예상
- 교통 혼잡을 저감하기 위해 인천대로 및 연결도로의 지하도로 건설 추진
  - \*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금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반영

< 공단고가교~서인천IC >	< 문학IC~공단고가교 >
▶ 사업규모 : 6.55km, 4차로	▶ 사업규모 : 3.05km, 4차로
▶ 사업기간 : 2021.~2027.	▶ 사업기간 : 2026.~2030.
▶ 총사업비 : 5,790억원	▶ 총사업비 : 2,547억원

### 4 기대효과

- 지하도로 건설을 통해 인천대로 교통 혼잡 저감
- 확보된 상부공간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여가 및 복지 향상
- 도심단절 해소 및 환경개선으로 원도심 활성화 촉진

### 5 건의사항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국비 지원

- ①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병행 추진에 따른 국비 조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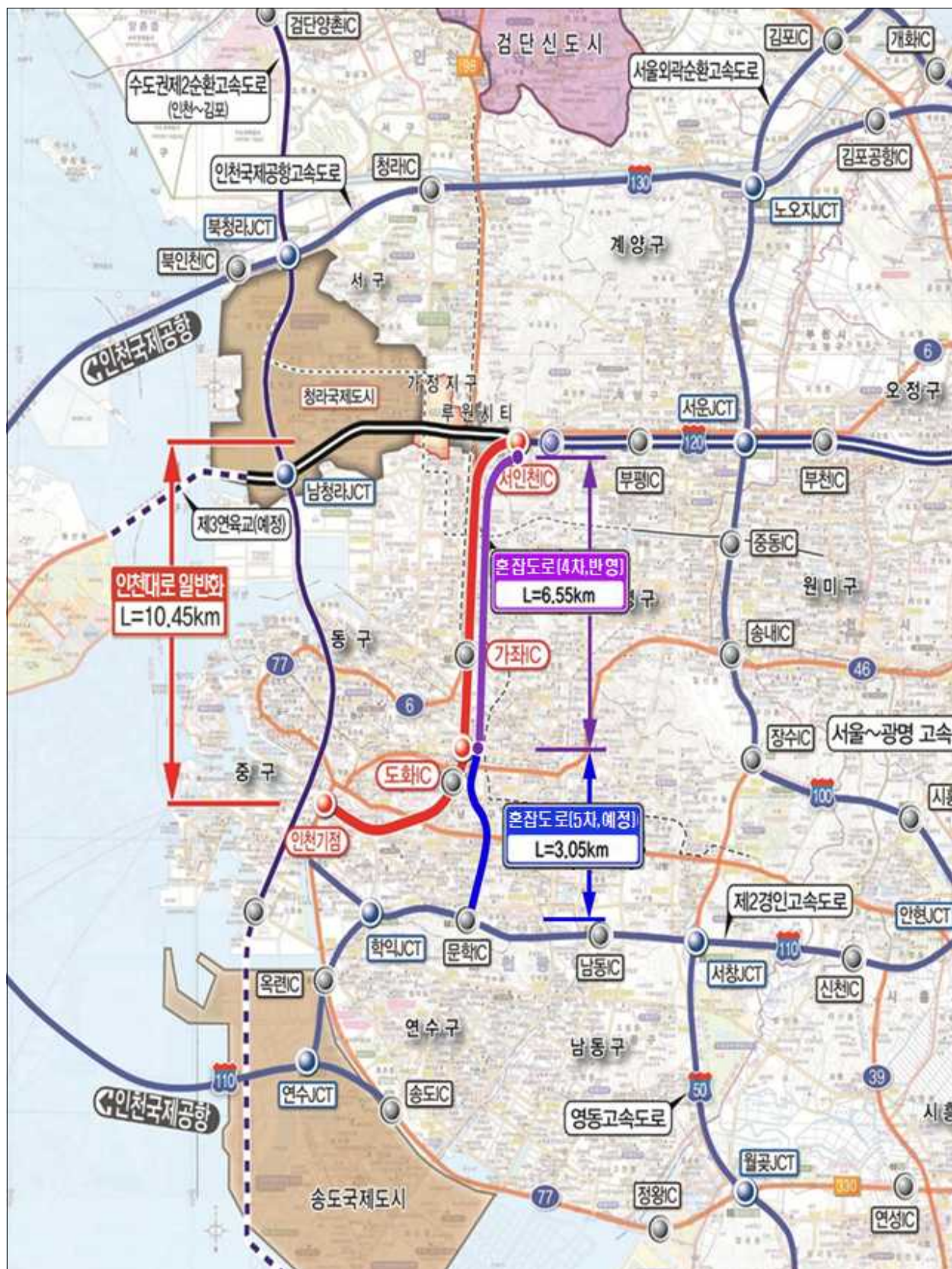
\* 상부 :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하부 : 지하도로 건설(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 ② (혼잡도로 개선계획 추가 반영) 남북측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문학 IC~공단고가교 구간 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

인 천 광 역 시	고속도로재생과장	임 상 균	032-440-5693	일반화정책팀장	김 민 규	032-440-4181
-----------	----------	-------	--------------	---------	-------	--------------



## 참고



## ⑦ 경인선 지하화

### ① 그간의 역사

- 1899년 개통된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 약 120년 동안 인천-서울 간 여객·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수도권 성장에 중추적 역할 수행
  - \* (경인선) 개통(1899년), 복선화 완료(1965년), 전철화 완료(1974년), 복복선화 완료(2005년)
- 반면, 지역 단절 및 슬럼화, 소음·진동 등 환경문제, 노후역사 및 철길 주변 미관 저해 등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하화 요구 증가
- 해당 지방정부(인천 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 구로구, 부천시)와 지역 주민은 추진 위원회 발족 및 서명운동, 타당성조사 등 지하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낮은 사업성과 제도적 미비 등으로 한계에 봉착
  - 제20대 국회에서 제도 마련을 위해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09.10.: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경인선지하화 구상 논의  
▶'13. 9.: 경인선지하화 추진위원회 발족식 개최  
▶'13.12.: 경인선지하화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  
▶'14. 2.: 경인선지하화 100만 시민 서명운동 선포식 체결  
▶'16.11.: 경인선지하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결과) 도원역~구로역(23.9km), 7조 2,556억원, 경제성(B/C) 0.55

-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을 계기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과 경인선 철도 시설의 효율적 연계방안 사전타당성조사(‘20.7~‘21.12)”를 시행 중

### ② 필요성

- 낙후된 원도심 대개조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창출
  - 경인선은 인천 중심부에 위치해 동과 서, 남과 북으로 단절시키고, 소음·진동 등 환경 상 악영향으로 주변지역의 쇠퇴를 야기
    - \* 고령화, 노후건축물, 경제활동인구, 종사자 수 등을 지표로 한 도시쇠퇴진단 결과, 경인선 주변 중심으로 매우 높은 쇠퇴수준을 보임



- 지상에 설치된 경인선으로 인해 도로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보도 지하화에 따른 보행환경 매우 열악
- 쇠퇴한 경인선 주변 지역에 다수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성 악화 등으로 중단되거나 장기간 표류 중

\* 인천역주변구역·동인천주변구역·제물포역세권구역·도원역주변구역(해제)

### ○ 변화하는 교통수요를 반영한 철도운영의 효율화 제고

- 경인선에 집중되던 여객·화물 수요가 인천1·2호선, 서울7호선 연장, 공항철도 개통과 GTX-B·제2경인선 계획, 인천 신항 건설 등으로 경인선 기능이 축소되는 추세

\* 인천1호선(1999년 개통), 인천2호선(2016년 개통), 서울7호선 석남 연장(2021년 개통)청라 연장(2027년 개통 예정), GTX-B(2027년 개통 예정), 제2경인선(예타 중)

## ③ 주요 사업·정책 내용

### < 사업개요 >

- 구간 : 인천역~구로역(27km, 21개역)  
\*(인천구간) 부개역~인천역(13.97km, 11개 역사)
- 총사업비 : 9조 1,228억원(복선으로 추진 시 5조 5,805억원)

### ① 경인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20~)

- 경인선 지하화는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대형사업이며,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
- 국토부가 시행 중인 “도시재생과 경인선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방안 사전타당성조사” 및 해당 지자체 협의를 거쳐 추진전략 수립

### ②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26~)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 ③ 특별법 제정('22~)

- 경인선 지하화는 8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며, 경제성과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요구되나, 자원조달 및 타당성 확보가 곤란

-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제도 미비
- 재원조달, 타당성 확보 및 통합개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4 기대효과

- 쇠퇴한 경인선 주변과 철도부지의 통합 개발로 도시 경쟁력 강화
- 소음·진동 등 환경과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도심 속 녹지공간이 확충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5 건의사항

☞ 수도권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한 획을 긋는 경인선 지하화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① (추진전략 수립) 경인선 지하화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주도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추진전략 수립
- ②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법정 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인선 지하화 반영
- ③ (특별법 제정) 재원지원, 타당성 확보 및 통합개발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

인천광역시	철도과장	류윤기	032-440-5683	철도정책팀장	남상용	032-440-3911
-------	------	-----	--------------	--------	-----	--------------

## 참고 노선도/현장사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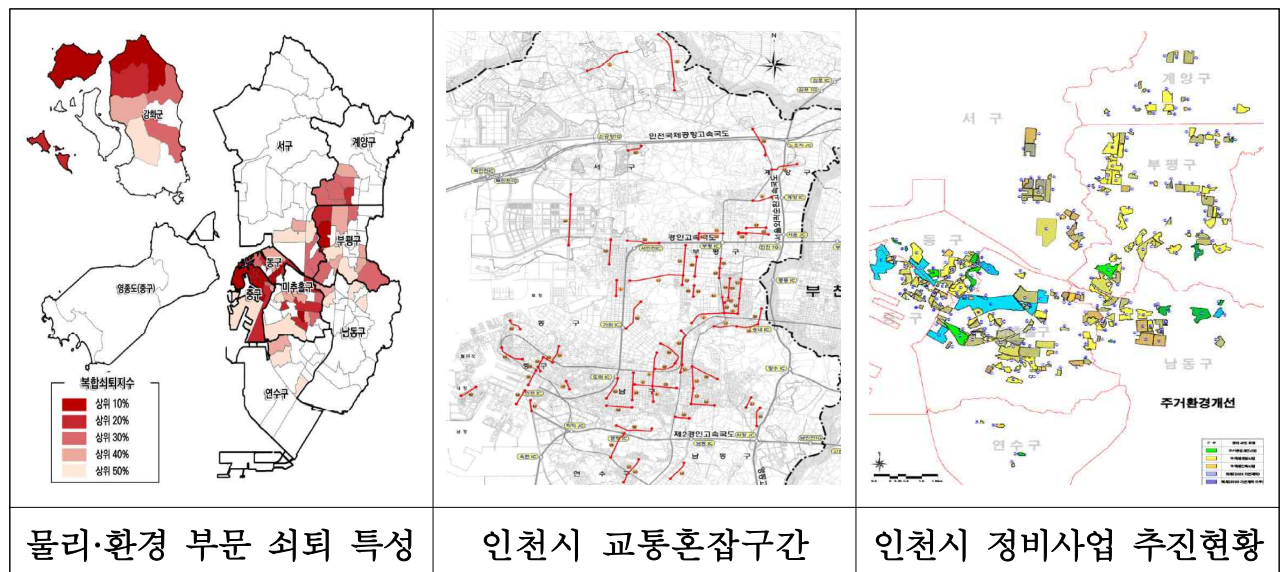
### □ 노선도



### □ 현장사진



### □ 경인선지하화 필요성



\*(자료)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2019.12.)

## ⑧ 내항 우선개방(1·8부두) 및 항만재생 추진

### 1 그간의 역사

- 소음분진 피해 등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내항 개방 요구\*와 인천내항 1·8부두 물동량 감소\*\*에 따른 부두기능 폐쇄 진행

\* 국회청원('07년, 7만2천명), 고공농성('13년), 비상대책위 발족('14년)

\*\* 연도별 물동량: 26,682천RT('16년) 23,535천RT('17년) 21,213천RT('18년) 20,854천RT('19년)

- 재개발계획 고시 후 민자유치 무산(2회, '15~'16)에 따라 공공개발 전환('16.12) 및 IPA·인천시·LH 공동용역 시행('17~'19)
  - 사업성을 이유로 LH가 포기('19.7)하면서 IPA 단독 추진 결정('20.1)
- IPA는 지역의견 수렴·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20.4~9월)하여 사업계획(안) 제출('20.9.29.),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1.8월)
- 항만재개발의 착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착공 전 까지 시민들에게 해양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우선개방 추진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12.31.)에 착공 시까지 개방 명시

### 2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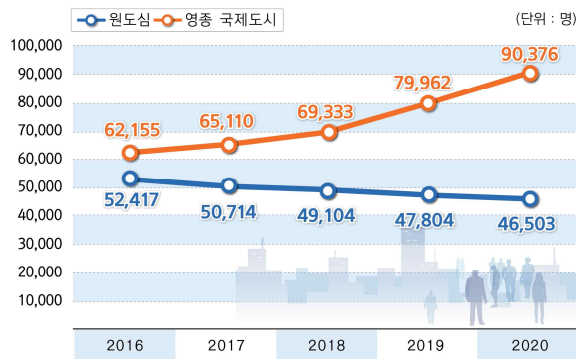
- 그간 닫혀있던 바다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조속한 항만재생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 '07.10월: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조속 추진 국회 청원(주민 72천명)
  - '15. 11월: 내항 재개발 조속추진 주민 쉼기대회\*(주민 5,000여명)
    - \* 8부두 전면개방 및 내항재개발 조속추진(IPA직접시행, 해수부 국비지원)
  - '21. 3월: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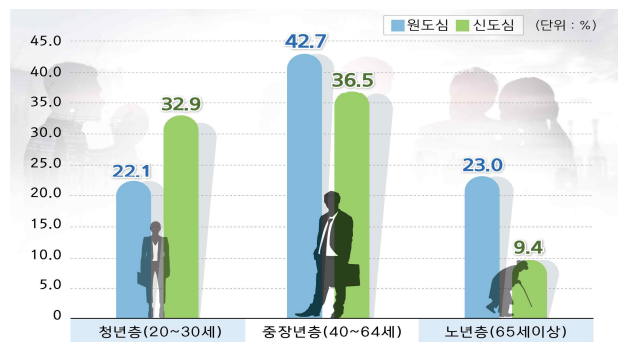
○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지역의 쇠퇴와 물동량 감소에 따른 항만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필요

- 인천 중구 원도심은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도시활력을 잃고 있음

[중구 원도심과 신도심(영종) 인구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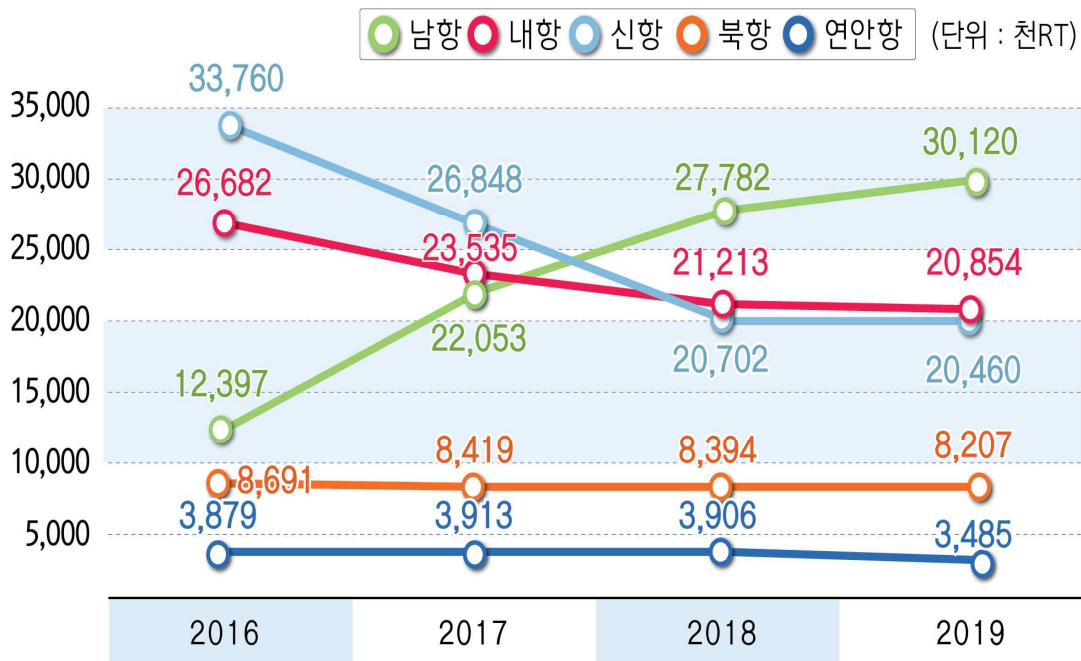
[중구 원도심과 신도심 청·장년층 인구비율]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20, 인천시중구)

- 인천내항은 시설노후화, 대형선박 수용한계 등의 이유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인천내항 물동량 변화추이]



자료 : 인천항 부두별 물동량 현황(2019, 인천항만공사)

※ 관련지역: 중부생활권 (현재: 95만명 → 계획: 99만명)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① 인천내항 시민우선개방(1·8부두)(~재생사업 착공 시)

- 항만재생사업 착공 전까지 우선개방을 추진\*하여 내항 재생 추진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신을 잠재우고 시민들의 수변접근성 실현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12.31.)에 착공 시까지 개방 명시

- 위치/규모: 인천 중구 내항 1·8부두 일원 289,000m<sup>2</sup>(약 8.7만 평)
- 기간: 1·8부두 재생 착공 시까지

- 개방 유희부지를 지역주민 및 청년에게 우선 제공하여 항만재생 테마의 창업 · 문화 · 관광 공간\*으로 활용

\* 활용방안: 청년창업공간, 각종 페스티벌, 영화 · k-pop 촬영, 버스킹 등

- 개방구역 내 트램을 구축하여 인천역 및 신포역 등과 환승체계 마련 · 내항접근성 확보 등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 구현

- 구 간: 부평역(GTX-B, 경인선)~가좌역(인천2호선)~인천역(경인선)~연안부두
- 규 모: 연장 18.7km,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기간/사업비: 2023. ~ 2032. / 3,935억원(국비 60%, 시비 40%)

#### ② 인천내항(1·8부두) 항만재생('22~'27)

- 항만과 도시가 함께하는 인천 해양관광의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노후화된 항만과 기존 원도심의 도시활력 증진을 위하여 인천내항과 기존 원도심을 연결하고 수도권의 해양문화 도심공간 조성

- 현재 IPA에서 사업계획(안) 제출('20.9.29.),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1.8.)되어 추진 중이나 후속 행정절차\* 이행 후 본격 사업추진까지 장기간 소요 예상

\* 예비타당성조사(본조사 9개월, 추가 3개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11개월) 등

- 안정적 사업성 확보 등을 고려, 세부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 및 제2여객터미널 ~ 서해대로 쪽으로 구역확대 필요

\* 인종로 지하차도(375억), 보도육교(66억), 신포지하보도 연장(88억), 내부도로 등(162억)

- 위치/기간: 인천 중구 내항 1·8부두 일원 / 2022.~ 2027.
- 규 모: 428,000m<sup>2</sup>(약 13만평) / 추가 확장규모: 약 200,000m<sup>2</sup>(6만 평)
- 총사업비: 5,003억원 (국비 691억) ※ 토지비 3,036억원 포함
- 시 행 자: 인천항만공사(IPA)

#### 4 기대효과

- 유허 부두를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내항 항만재생사업 조속 추진(1·8부두)을 통한 새로운 기능 도입 및 공간적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침체의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수변이라는 지역특성을 활용한 친수문화·관광 활성화
  - 항만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수변공간의 개방 및 재생을 통해 지역만이 가지는 독특한 매력 요소를 창출하여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 기대

#### 5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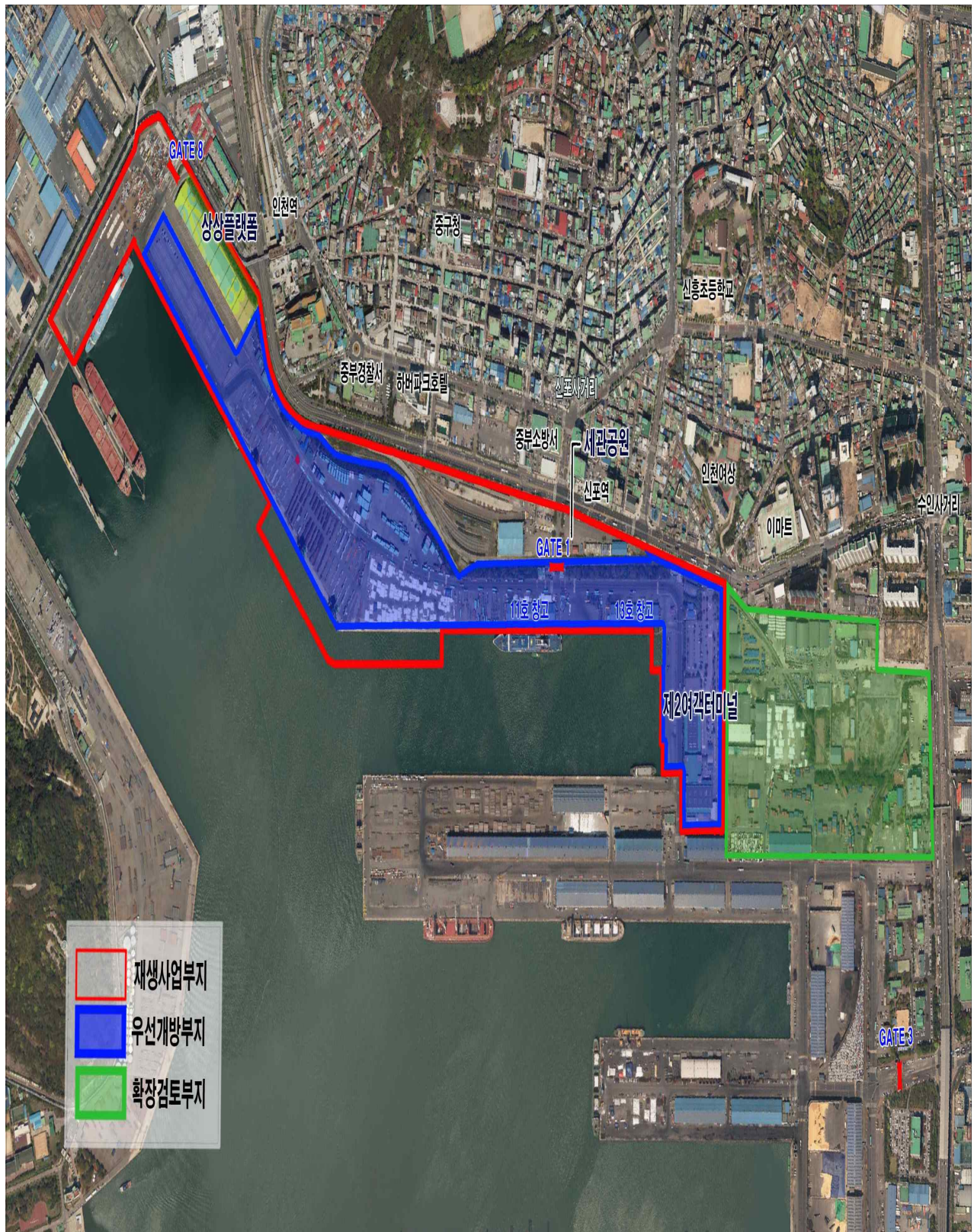
- ☞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으로 조성하는 내항(1·8부두) 우선개방과 재생사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지원

- ① (우선개방 협조) 289,000m<sup>2</sup> 개방, 사용료 면제, 보안구역 해제 등
- ② (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조속 이행)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해수부) 등 행정절차 조속이행
- ③ (국비 지원) 항만재생사업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약 691억원) 지원
- ④ (사업구역 확대) 항만구역 외 인근 국유지, IPA 소유토지, 사유지를 포함하여 약 200,000m<sup>2</sup>(약 6만 평) 구역 확대

인 천 광 역 시	산 업 진 흥 과 장	이 남 주	032-440-5021	벤처·소부장팀장	조 동 주	032-440-4296
인 천 광 역 시	철 도 과 장	류 윤 기	032-440-5683	도시철도팀장	이 상 열	032-440-3916
인 천 광 역 시	재 생 콘 텐 츠 과 장	조 승 환	032-440-5026	내 항 재 생 팀 장	김 삼 희	032-458-7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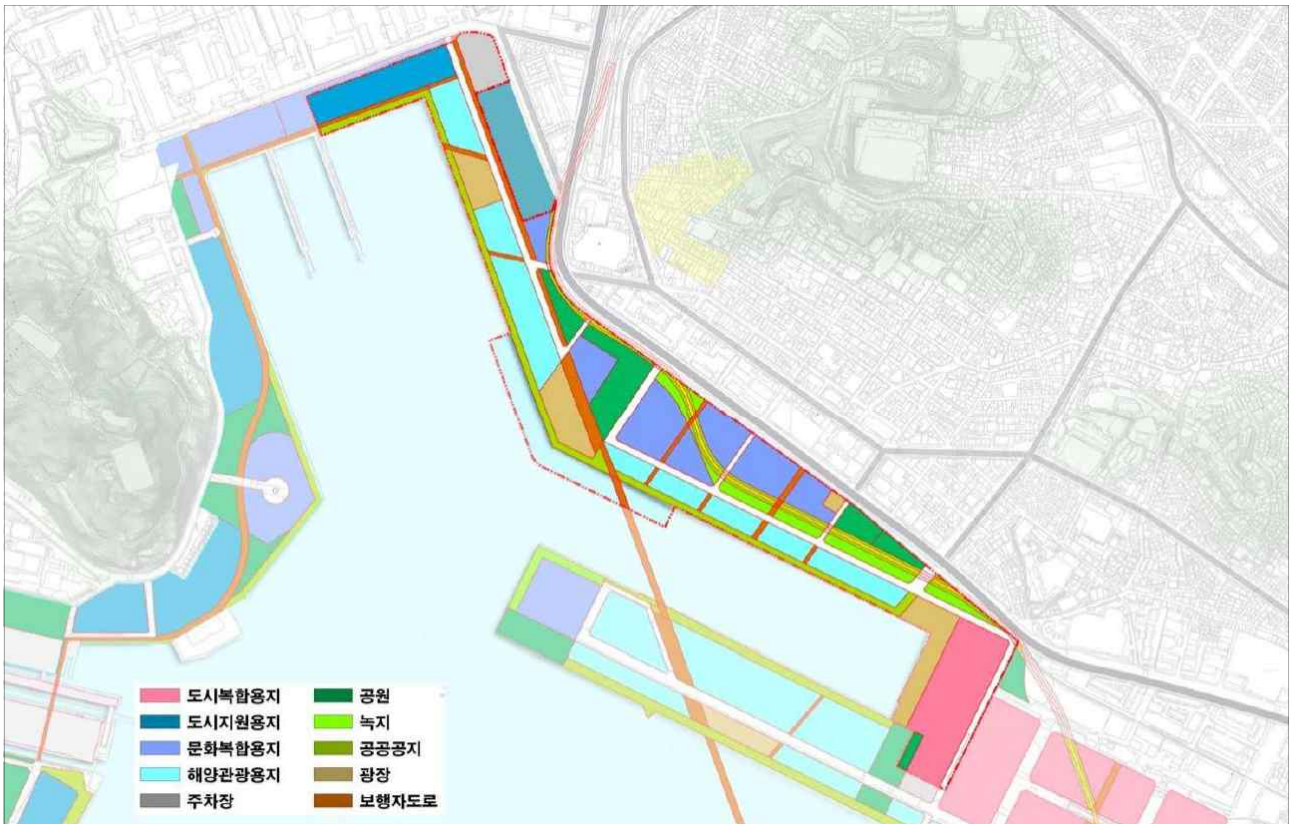
## 참고 1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 사업부지 및 우선개발부지 위치도





## 참고 2 토지이용계획도 및 조감도

### □ 사업계획(안)(인천시 · 항만공사 · NH)



## ⑨ 인천에 필요한 정부기관 유치 및 존치

### 1 그간의 역사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립 확정('20.3. 확정, '25.3.개원 예정) 이후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21대 총선 공약(인천고법 서구 유치)으로 등장
    - \*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원(검단신도시 공공청사부지), 부지면적 2만 3,306㎡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6.4., 신동근 의원 / '20.6.24., 김교홍 의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 (공공기관 존치) 국가균형발전위, BH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보고 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언급('20.7월)
    - 국무총리,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신중' 입장('20.7월)
    - 관련법안 발의, 당권주자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강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균형발전 특위구성 합의('20.8월)
- ※ 국토연구원,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일부 수도권인구 분산효과는 있었으나, 지역 성장거점 기능수행에 한계 평가('20. 8월)

### 2 필요성

#### <인천고등법원 유치>

-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 인천은 2010년 중반 이후에도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해 온 특·광역시
    - \* 다른 모든 지방광역시는 2010년 초반부터 인구 감소
  - 인천지법에 접수되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처리건수\*는 타 광역시 고등법원(대전, 부산 등)과 유사 또는 상회
    - \* ('19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인천 45.4건, 부산 45.3건, 대구 38.5건

## ○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 필요

-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인천이 유일하며 서울고법의 과중한 사건 수\*로 인해 항소심 처리 지연

\* 서울고법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처리건수(92.8건)는 타시도 고법(부산, 대구 등) 대비 2배

- 수도권외의 교통 혼잡으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 시 장시간 소요

\* (인천) 대중교통 96.1분(강화 171.8분), 승용차 71.5분(강화 94.5분)

\* (수원) 대중교통 89.7분, 승용차 67.3분

## ○ 서구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민원 지속 제기

- 민원건수 : 총 922건('20. 9월 ~ '21. 8월) \* '21. 7, 8월 접수민원의 약 98% 서구 거주자
- 시민단체의 대선후보 공약 반영 지속 요구

▶ 시민네트워크,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변호사회, 인천시민재단 등  
\* '21.7.26., 인천일보, 「“인천고법, 대선공약으로” 한목소리」  
\* '21.8.22., 중부일보, 「인천고법 유치, 대선공약화에 민·관·정 뜻 모아야」

## <공공기관 존치>

## ○ 일률적인 균형발전 논리보다는 지역자원과 연계되는 핵심기관은 존치 필요

-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경기와 인천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천의 역차별이 심화되는 문제 발생

※ 지역경제 주요 지표(통계청, 2018년 기준)

- GRDP(조원) : 경기 1위(462.2) > 서울 2위(414.0) >> **인천 7위(87.9)**

- 1인당 GRDP(백만원) : 서울 3위(45.1) > 경기 7위(36.1) > **인천 12위(30.6)**

- 이전대상으로 언급되었던 3개 기관\*은 수도권 매립지, 공항·항만 등 지역 시설·인프라 및 관련 산업 기반과 연계된 기관

\*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 인천시 국회의원, 시의회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결의문 발표('19.11월, 12월)  
▶ (지역언론) 인천 공공기관 이전반대 공동대응 필요 등 다수 보도('20.8월)  
▶ (사회단체) 평화복지연대 인천소재 정부 공공기관 이전반대 TF 구성('20.8월)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① 인천고법 유치('22~)

-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천, 울산)으로 수도권 서부권역의 열악한 사법서비스 향상 및 앵커시설 도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 ② 한국환경공단 인천(서구) 준치('10~)

- 서구의 집적된 환경분야 공공기관을 거점으로 연구개발특구(에코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고 그린뉴딜 정책수행의 최적지로 육성할 계획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 중국발 미세먼지 예보 등 수도권 환경정책에 대한 중심역할 수행 중

- ▶ 설립목적 :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
- ▶ (설립) 2010, (위치) 인천 서구 환경로 42, (상주인력) 960명
- ▶ (주무기관) 환경부

#### ③ 항공안전기술원 인천(서구) 준치('13~)

-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인증센터, 드론관련 기업이 입주한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드론 클러스터 구축 추진 중
-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인접, 항공사 및 항공정비 산업체가 집중된 항공 안전관련 인프라 접근성 용이

- ▶ 설립목적 : 항공안전 기술선도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 기여
- ▶ (설립) 2013, (위치) 서구 로봇랜드로 155-11('17.12월 입주), (상주인력) 156명
- ▶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 ※ 드론인증센터 299억원, 드론전용비행시험장 60억원 등 국비 359억원 투입

#### ④ 극지연구소 인천(연수구) 준치('04~)

- GCF사무국, 지역 내 우수 산·학 인프라 등과의 연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R&D 분야에 시너지 발생
- 이전 시 건물 및 각종 시설·장비 등 기존 인프라 투자 손실 발생(1천억 원 이상)



- ▶ 설립목적 : 극지활동·연구 분야 국내최고 전문기관
- ▶ 연혁 : (설립) 2004, (위치) 연수구 송도미래로, (상주인력) 368명
- ▶ 주무기관 : 해양수산부
  - ※ 부속시설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추가 건립( '22.4 착공 / '23.11 준공)

#### 4 기대효과

-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송관련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등 수도권 지역주민의 사법편리성 제고
- 지역의 중요 인프라·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입지로 지역혁신 활성화

#### 5 건의사항

☞ 신도시 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인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인프라와 산업기반과 연계한 3개 공공기관\*의 인천 존치

\* 한국환경공단, 항공기술원, 극지연구소 인천 존치

-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경기와 인천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인천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 방지 필요

인 천 광 역 시	법 무 담 당 관	구 영 미	032-440-5008	송 무 팀 장	신 소 영	032-440-2291
인 천 광 역 시	환경기후정책과장	송 현 애	032-440-5978	환경정책팀장	한 중 원	032-440-3511
인 천 광 역 시	해양항만과장	임 현 택	032-440-5051	해양산업팀장	나 민 환	032-440-4846
인 천 광 역 시	항 공 과 장	안 광 호	032-440-5050	항공산업팀장	이 상 욱	032-440-4806

## 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 (Y자) 완성

### 1 그간의 역사

-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수도권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여 파리, 런던 등 세계적 도시 수준의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도입을 추진

\* GTX-A(공사, '24년 개통 예정)·B(기본계획, '27년 개통 예정)·C(설계, '26년 개통 예정)

- 정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19.3월)을 계기로 '광역교통 2030'을 수립,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수도권 서부권에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19.10월)

- '광역교통 2030' 발표 이후 영종·청라와 검단에서 노선 유치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수도권 전역 및 정치권으로 확산

- 이에 우리 시는 정부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남부광역급행철도\*와 연계한 노선망을 구상

- 경제성이 가장 높은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20.10월)

\* 서울시가 서울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구상한 노선(부천종합운동장~잠실)으로 국가 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으나, 강남 집중을 이유로 미반영

\*\* 인천국제공항/김포·검단~부천종합운동장~남부광역급행철도~하남

- 정부는 경제성,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21. 7. 확정·고시)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21.1km, 22,475억원



## 2 필요성

### ○ 수도권 주요 거점 간 30분대 연결을 통한 출퇴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천과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길 위에서만 3시간 이상을 보내는 등 매우 피곤한 삶을 보내고 있는 실정
-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상당\*한 상황

\* (대규모집회) 김포·인천 시민, 'GTX-D 노선 강남직결' 요구 차량 시위('21.7. 4.)  
(언론보도) 인천 영종·청라 주민 "GTX-D 인천공항서도 출발해야"(중부일보, '21. 5.23.)외 다수  
(서명운동) GTX-D 인천 원안(Y자 노선) 반영을 위한 서명운동 및 서명지 전달(국토부)  
①(서구청) '21.5.17.~6.10. / 총 119,330명, ②(중구청) '21.5.27.~6.13. / 총 20,328명

### ○ 인구 분산을 통한 서울 부동산 안정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서울 중심부는 인프라 투자 및 인구가 집중된 반면, 수도권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으로 소외
- 수도권 동서를 횡단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입을 도입하여 인구 분산\*을 통해 서울 중심부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영종), 신도시(인천검단·계양, 김포한강, 부천대장, 하남교산, 위례)


※ (해외사례) 영국은 런던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Cross Rail(레딩~셰필드, 117km) 건설을 통해 도심 집중 분산 및 동서부 외곽지역 개발 촉진

### ○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세계 TOP3 공항 도약

- 인천공항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통하는 국제적 공항이지만 수도권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전무
- \* 히드로공항, 스키폴공항, 푸동공항 등 허브공항은 고속기능의 철도가 운행 중
- 공항 4단계 확장과 공항기능 통합(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에 따른 대규모 신규 여객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

## 3 주요 사업·정책 내용

### < 사업개요 >

- 사업구간 : 김포~검단~계양  
인천공항~청라~가정  부천종합운동장~삼성~하남
- 사업규모 : L=110.27km, 정거장 18개소, 차량기지 2개소
- 총사업비 : 10조 781억원

## ❶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신속 추진('21~)

- 검단·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예비타당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 조속 추진

## ❷ GTX-D Y자 노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26)

- GTX-D Y자 완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부천종합운동장~삼성~하남 노선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 4 기대효과

- 출퇴근시간 단축으로 시민들에게 출퇴근이 여유로운 일상을 제공
  - \* 인천국제공항→삼성(120분→45분)·하남(138분→56분) / 검단→삼성(130분→28분)·하남(165분→39분)
- 서울 도심 집중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TOP3 허브공항 도약 기여

## 5 건의사항

☞ GTX-D Y자 노선 완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속 추진) 검단·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 신속 추진
- ②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GTX-D Y자 완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부천종합운동장~삼성~하남 노선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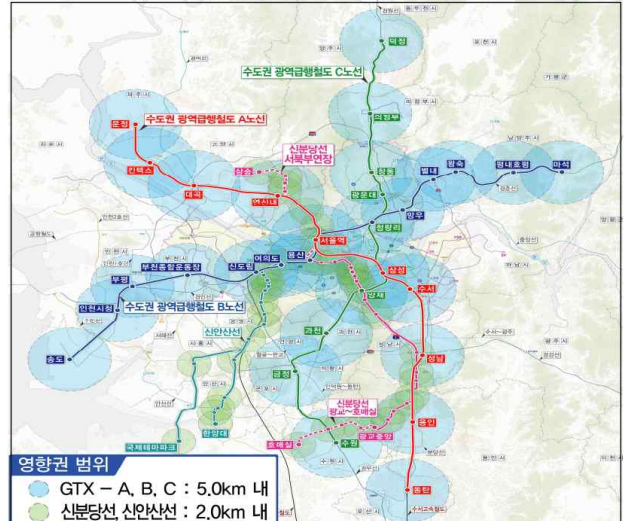
## 참고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 □ GTX-A · B · C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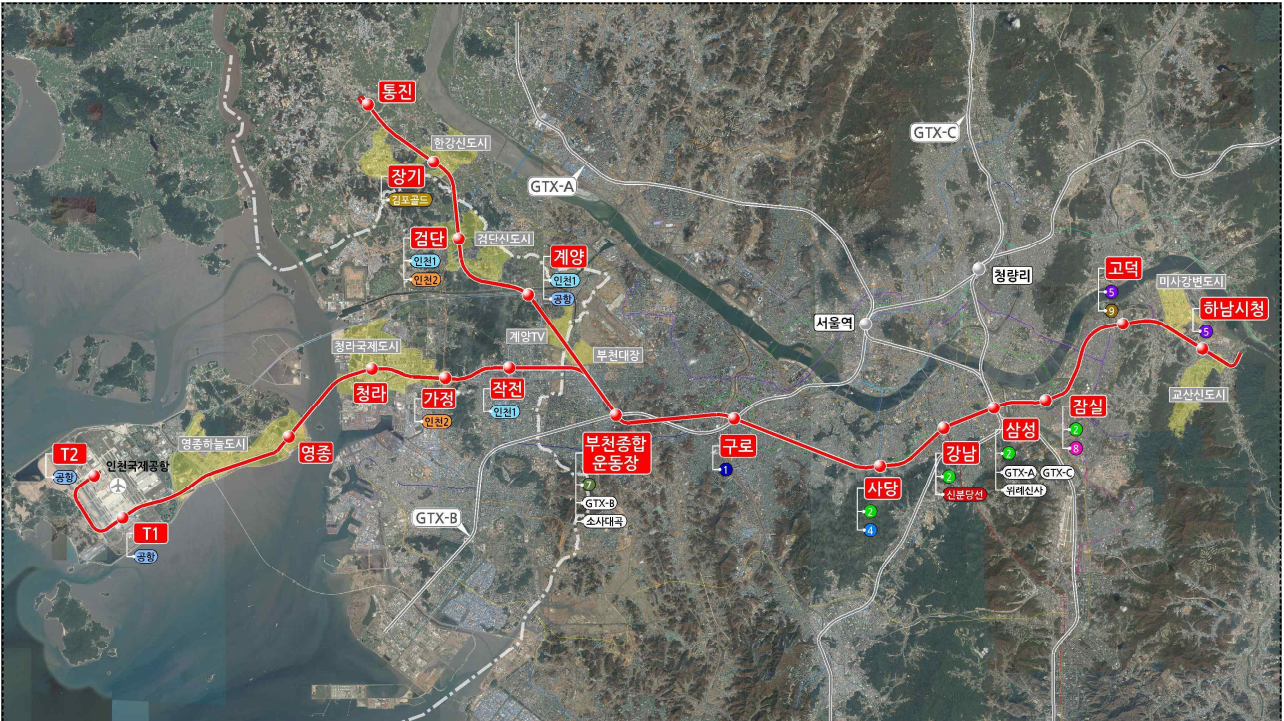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



【 급행철도 수혜범위 】

### □ GTX-D Y자 노선



- 사업구간 : 김포~검단~계양 > 부천종합운동장~삼성~하남  
인천공항~청라~가정
- 사업규모 : L=110.27km, 정거장 18개소, 차량기지 2개소
- 총사업비 : 10조 781억원



## ① 제2경인선 조기 착공

### 1 그간의 역사

- 인천 북부지역은 공항철도, 서울7호선, 경인선 등으로 서울도심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논현·도림·서창 등 남부지역은 서울과의 연계 철도망이 전무한 실정
- 이에 따라 제2경인선의 실현을 위하여 '18.6월 인천광역시장 '수도권 교통중심도시 인천'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
- 제2경인선의 조속 시행을 위해 국토부(국가철도공단),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18.10월 국토부(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 본 용역을 통해 경제성(B/C 1.1)을 확보한 노선을 발굴하여 '19.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고, '19.8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

### 2 필요성

- 서울 접근성 획기적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광역철도 소외지역인 수도권 서남부에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철도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도시경쟁력 강화
  - 기존 경인선에 한정된 수요를 분산하여 혼잡율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향상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
  - 철도 이용에 소외되었던 연수구 청학 및 남동구 논현·도림·서창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 사업개요 >

- 사업구간 : 청학~신연수~인천논현~도림사거리~서창2지구~인천~은계~옥길~광명  
운영구간(37.35km) : 연수구 청학~광명 노온사동~구로~노량진  
\* 광명~구로(9.4km)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 구로~노량진(7.3km)은 경인선 공용
- 사업규모 : 연장 20.63km, 정거장 8개소
- 사업기간 : 2018. ~ 2028.(2029년 개통)
- 총사업비 : 1조 3,361억원

### 4 기대효과

-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서울 접근성 획기적 개선  
\* 인천(청학) ~ 서울(노량진)간 통행시간 : 80분 → 42분(38분 단축)
- 출퇴근 시간 40분대 단축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 실현

### 5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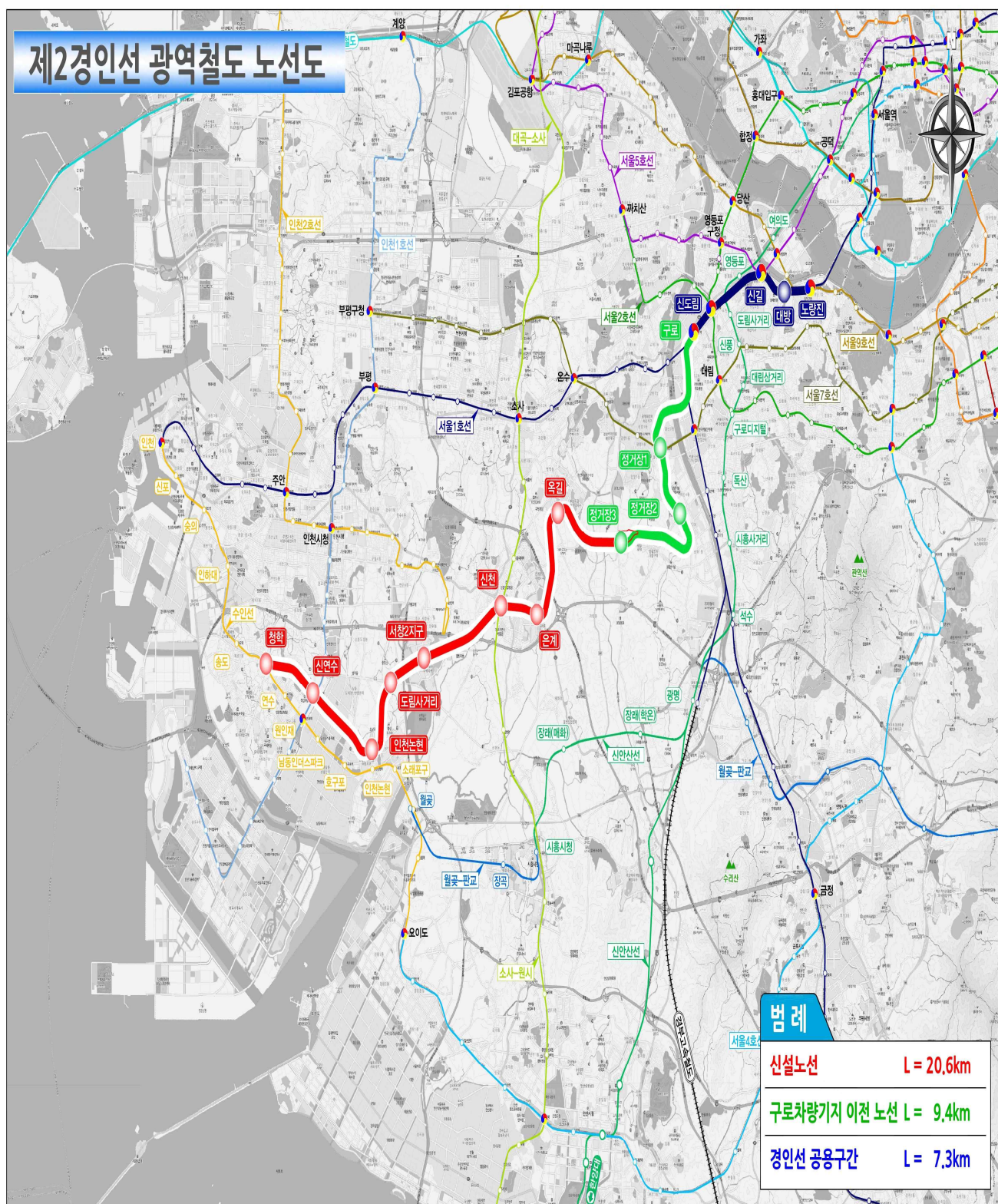
☞ 제2경인선 광역철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① (신속한 예타 통과) 제2경인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 마련
- ② (2024년 조기 착공) 예타 통과 등 관련절차 신속 이행을 통한 2024년 조기 착공 추진

인 천 광 역 시	철 도 과 장	류 윤 기	032-440-5683	광역철도팀장	김 종 진	032-440-3891
-----------	---------	-------	--------------	--------	-------	--------------

## 참고

## 제2경인선 노선도



## ④ 제4 경인고속도로 건설

### 1 그간의 역사

- 인천 지역의 동서축 고속도로인 제1경인, 제2경인 등의 지·정체에 대한 해소 대책 마련 필요성 지속 제기
  - \* 현재 제1경인, 제2경인, 제3경인 서비스 수준 E(불안정 교통류)~F(와해상태)
- 제1경인과 제2경인 사이에 원도심과 서울을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 추가 건설 방안 모색
  - \*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민간제안자, '20.10.)을 받았고,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중(KDI)

### 2 필요성

- 인천~서울을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인 제1경인, 제2경인, 제3경인 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E~F로 지·정체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제1~제3 경인고속도로 교통량>

- \* 최근 5년간 교통량은 연평균 8.34%씩 증가, '15년 대비 '19년 기준 38%이상 급증



-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속적인 원도심 인구 유출 문제 해결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필요
  - \* 최근 5년 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원도심 인구가 지속 감소(▽1.36%~2.58%)
  - ※ 관련지역: 중구, 동구, 남동구, 서구(1,307,293명, '19년 기준 → 1,355,540명, '40. 기준)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인천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대심도 터널) 건설
  - 서구 가좌동(백범로)~경기도 부천시(경인로)~서울 여의도 연결
  - 신규 고속화도로 건설로 기존 동서축 고속도로는 물론 상습정체구간인 백범로와 경인로의 지·정체 완화 가능

#### < 사업개요 >

- 사업구간: 인천시 서구 가좌동(가좌IC)~서울 여의도
- 사업규모: L=26km, 양방향 2~4차로, 대심도 터널
  - 인천 8.3km, 서울 12.2km, 경기 5.5km
- 총사업비: 21,000억원

※ (관계기관) 국토부(국가계획 반영), 기재부(국비 지원), 서울특별시·경기도(지방비 부담, 인·허가 등 협조)

### 4 기대효과

- 인천~서울간 기존 동서축 고속도로 교통혼잡 완화
  - \* (서비스수준) 미시행시 E(불안정 교통류)~F(와해상태) → 시행시 D(안정된 교통류)
- 서울 주요지역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시간 및 비용 단축으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만족도 증가 기대
  - \* (인천↔강남) 최대 28분 단축, 6,818원 절감(1회 통행기준 1당)
  - \* (인천↔여의도) 최대 38분 단축, 8,995원 절감(1회 통행기준 1당)
- 인천 등 수도권 원도심의 인구유입으로 원도심 도시재생 기대
  - \* (고양시 사례) '15년 원흥~강매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최근 10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20.22%) 및 대규모 편의시설 입주 등 도시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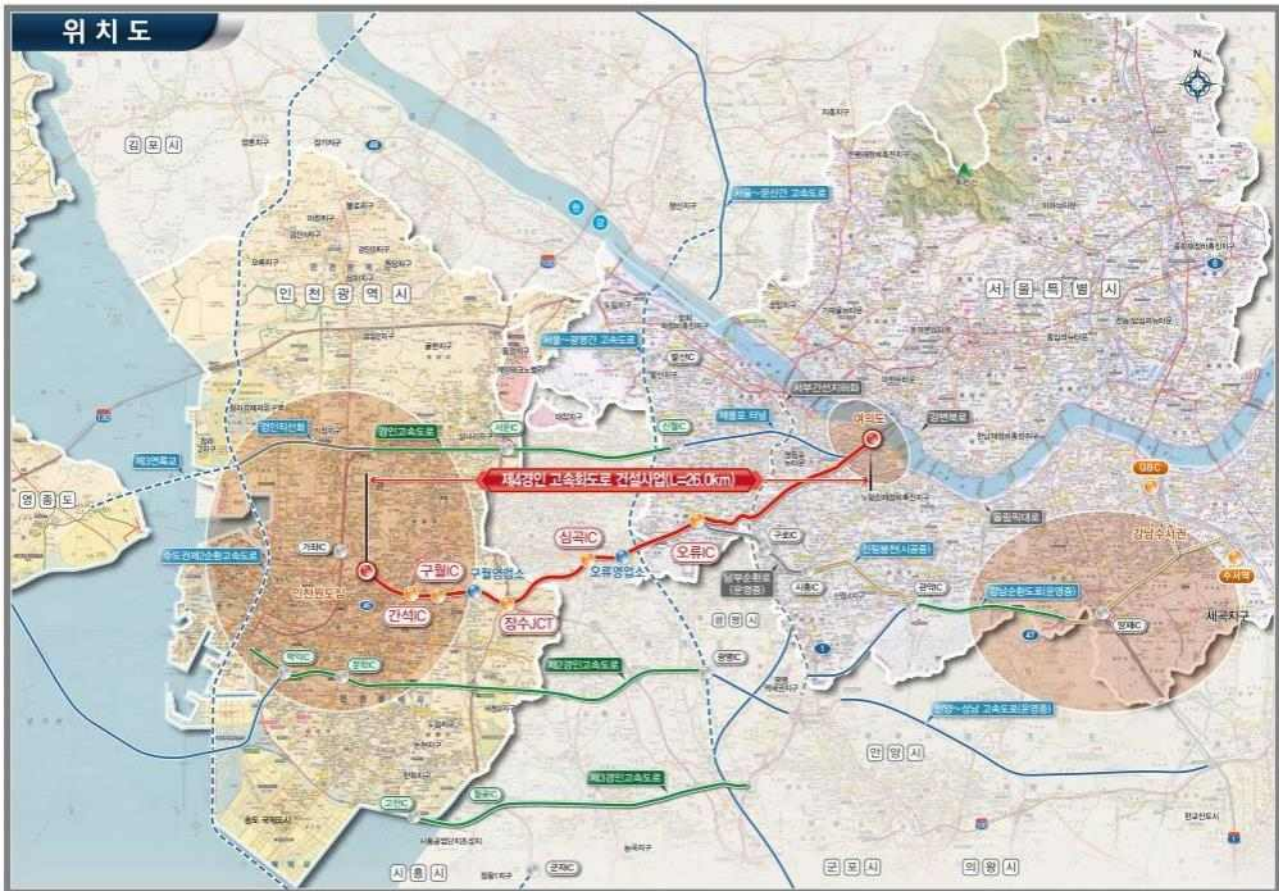
### 5 건의사항

☞ 신규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수도권의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건의

- ① 신속한 착공을 위해 민자적격성검토 등 빠른 사전절차 이행 지원
- ② 3개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감안하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광역도로로 반영

인 천 광 역 시	도 로 과 장	김 진 선	032-440-5034	도 로 계 획 팀 장	최 점 수	032-440-3771
-----------	---------	-------	--------------	-------------	-------	--------------

## 참고 위치도 및 노선도



## ⑫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

### 1 그간의 역사

- 인천시는 원도심, 신도시, 도서지역 등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지역이 혼재,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의료 취약지\* 존재

\* 1차 의료 취약지 (강화 화도면, 강화 삼산면), 응급의료취약지 (강화, 옹진), 분만 및 혈액투석 취약지(옹진)

- 인천시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7대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지만, 병상 비중은 울산 다음으로 낮은 상황

\* 공공의료기관 비중 4.1% (평균 3.5%), 병상 비중 4.5% (평균 7.7%)

-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국내 관문으로 들어오는 해외유입 감염병 및 주요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마련, 부족한 지역사회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

- 국립대병원 부재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분원 유치를 추진 중이며, 중앙부처 등과도 지속 협의 중

- ▶('20. 9.) 인천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용역 추진
- ▶('20.11.) 영종 국립대학분원 유치 및 설립에 대해 BH 건의
- ▶('20.12.)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보고 회의 시 VIP 건의
- ▶('20.12.~'21.9.) 인천시-서울대병원 간 업무협약 실시(총4회)
- ▶('21. 3.) 국립대병원 유치관련 교육부 방문

-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유입 위험이 타 시·도 대비 가장 높음\*에도 지난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지정 시 인천권역이 제외

\* '15~'18년 메르스 확진자, '20년 국내 첫 코로나 환자 인천공항에서 확인

- '22년 인천권역 추가 선정 필요성에 대해 시민단체 등 지속 요구, 유치 추진 민·관 협의체 운영, 의료기관 협력, 중앙부처 등 지속 건의 중

- ▶('18년) 보건복지부장관 인천 방문 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건의
- ▶('20년)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방문 시 재건의, 중앙부처 등 방문(총3회) 건의
- ▶('21년) 감염병 유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중앙부처 등 방문(총4회) 건의



## 2 필요성

### ○ 의료자원 부족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어디서든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적 인프라 필요,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공공의료기관 부족 진료권 (인천서북, 인천동북)

- 현 의료원의 지리적 편중으로 인한 균형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의료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등 제2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

### ○ 국가재난의료(감염병, 항공안전 및 테러대응) 대비 특성화 병원 설립

- 해외 유수의 공항도시는 항공재난 등 대비하기 위해 공항 인근(10km이내)에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운영 중

\* 도쿄 오모리병원(934병상, 하네다공항 4.5km), 뉴욕 Presbyterian 병원(2,678병상, 존에프케네디공항 10km)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된 재난이 국가 재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재난의료시설』 구축이 시급

\* (인천공항 현황) 국제여객 7천만명, 환승객 839만명, 국제노선 154개(동북아 최대)

### ○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 최적의 도시에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의 지리적 특성상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 위험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음

\* (메르스) 국내 메르스 확진자 100% 인천공항 통해 입국('15년, '18년)

- (코로나19) 최초 확진환자 발생('20. 1월) 등 해외유입확진자 3,550명('20.10.20.기준)

- 감염병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이 대부분 서울, 경기남부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서부지역과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방지의 전략적 요충지인 인천지역에 감염병 대응 의료 체계 구축 필요

\* '19년 입국자 4,677만명, 인천공항·항만 입국자 3,399만명(약 72.6%) ('19 법무부)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① (인천) 제2의료원 설립 ('22. ~ '26.)

-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제2의료원 설립 추진 중
  - \*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예정 ('21.10.~'22.9.)
-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설립방안 및 모델 정립 위해 제2의료원 설립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기능) 기본방향 설정, 설립방안 마련 , 운영 방법 등 논의 ('21.9.~'23. 8.)

#### ② (인천)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 ('22. ~ '26.)

- 재난 · 필수 · 공공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특성화 병원 설립

##### < 사업개요 >

- 위치 : 인천국제공항 주변(인천광역시 영종국제도시)
- 기간 : 2021년~2026년
- 규모 : 약 300병상 20개 진료과(대지면적 123,277m<sup>2</sup> : 37,357평)
  - ※ 중증필수의료(응급, 심·뇌혈관, 외상) 및 건강취약계층진료(산모, 신생아, 어린이, 장애인)
- 총사업비 : 약 2,829억원(토지매입비용 포함) ※ 인천시 : 토지제공

#### ③ (인천)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22. ~)

- 2022년 질병관리청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권역 선정

##### < 사업개요 >

- 위치 : 인천시 관내 (향후 지정)
- 기간 : 2022년 ~ 2025년
- 규모 : 11,789m<sup>2</sup>(병동 8,423m<sup>2</sup>, 주차장 3,366m<sup>2</sup>)  
개소당 36병상(중환자실 6개, 음압병실 30개) ※ 부지 자체 매입
- 주요시설 : 음압격리병동 36병상, 진단검사실, 음압수술실 , 교육훈련센터, 주차장 등
  - \* 서비스 부 등은 국고 미지원(약제부, 급식부, 오염관리, 중앙공급, 중앙창고 행정부, 의료진 숙소 등)
- 총사업비 : 409억원(국비 100%)
  - \* 장비구입비와 운영비는 추후 기재부 협의 및 예산 확보 후 지원예정



#### 4 기대효과

-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
- 상대적으로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영종 지역에 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항공 재난에 대한 대응태세 정비
- 신종 감염병 위기 시 권역 내 중증환자 집중치료
- 환자 의뢰, 이송체계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5 건의사항

☞ 대한민국 감염병 대응 최적의 요충지 내 기반시설 구축 및 인천의 부족한 공공병원을 신속하게 확충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

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고보조율\* 개선

\* 지방의료원 신축 시 (현행) 국비정액보조(165억원) → (개선) 건축비의 50% 국비 보조

②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 국가 재난의료와 필수보건의료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의료특성화 병원을 인천지역 내 조속 설립

③ (인천 최우선 권역 선정) 국가 재난 예방의 확산 방지의 전략적 요충지인 인천지역에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가 가능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선정

인 천 광 역 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안 광 찬	032-440-5017	보건정책팀장	강 경 희	032-440-2711
인 천 광 역 시	감염병관리과장	김 문 수	032-440-7801	감염병대응팀장	공 석	

**④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고도화****① 그간의 역사**

-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2000년대 초부터 공항과 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입지 강점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
  - \* 셀트리온('02), 삼성바이오로직스('11), 생고뱅코리아, 머크 등 앵커·다국적기업 입주
- 민선7기 이후 전략적 정책지원으로 산학연병이 결합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중이며, 대규모 민간투자도 진행중

- ▶(산업) 대·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67개 기업 입주
  - ※ 셀트리온 총 25조원 ('19.5월, 제3공장·연구센터 등)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1.7조원 투자('20.8월, 제4공장 등) 발표
- ▶(대학/연구소) 인천대, 연세대, 인하대 등 국내 대학 및 뉴욕주립대, 유타대, 겐트대 등 글로벌 캠퍼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등
- ▶(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송도세브란스병원('26), 청라의료복합타운('27) 등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국가안보 어젠다로까지 대두\*되고, 바이오 헬스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대통령 주재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21.8.5.)

-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수도권 내 공모사업 유치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부 주요 공모사업 유치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20.10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공정 교육시설 구축으로 연간 2천명 이상의 교육생 배출
- ▶K-바이오 랩 허브('21.7월 유치) 구축으로 바이오 신약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공간 및 실험장비, 특허 등 법률 서비스 등 원스톱 종합지원

**② 필요성**

- 우리나라 백신주권 확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바이오 클러스터
  - 국내 다른 지역에도 바이오 클러스터(전국 약20여개)가 있으나, 산·학·연·병,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정부지원조직 등 기술혁신에 필요한 모든 구성원과 네트워크를 갖춘 곳은 인천이 유일

- 전문가들은 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바이오분야 분산 지원·육성 시 기술 혁신에 있어 임계점을 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
- 바이오산업의 특성은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며 해외 기업과의 기술 경쟁에서 밀릴 경우 낙오 가능성도 상존
  - \* 예를 들어 인근 타국기업이 모든 변이를 막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 개발 시, 우리 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백신 판매, 연구개발 유인에 악영향)과 그에 따른 고용불안 가능성도 있음

### ○ 인천시민들은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기대

- 그동안 인천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이었고, 이로 인한 만성적 저임금 문제\*에 직면
  - \*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은 1,958만원으로 전국 평균(2,066만원) 보다 107만원 낮음
- 대표적 고부가 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은 인근 남동공단까지 밸류 체인을 형성하면서 인천 지역의 일자리 질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
  - \*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인천형 뉴딜 10대 과제 중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선정

### ○ 정부의 지원과 규제완화 등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의 바이오 선도도시, 선도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과 장비에 대한 과도한 초기투자 비용 해결, 각종 규제 완화, 인력 공급, 교통문제 해결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 필요
- 미국(보스턴), 프랑스(코스메틱벨리) 등 모든 성공적인 클러스터는 조성 초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반을 마련해 온 공통점

## 3 주요 사업·정책 내용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22~)

- 기 지정된 대구(합성신약), 오송(바이오신약)과 함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인천에 백신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필요
- 백신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인천에 지정함으로써 정부의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에 따른 백신 허브 기반 마련 가속화
  - \* 법적근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의 수립), 제5조(입지 선정 등), 제6조(지정)

## ②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23~)

- 바이오 분야의 낮은 원부자재 국산화율(14%)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원자재의 지역 블록화, 독점화 등으로 수급 애로 발생 우려
  - \*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글로벌 수요기업에서는 매년 약 1,000억원의 해외 원부자재 구입비 지출
-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 및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 및 신뢰성·실증화 지원 필요

▶ 총사업비 : 495억원(국비 295억, 시비 및 민간 200억)

## ③ K-바이오랩 허브 조기 구축('21~'25)

- 바이오분야 중소·스타트업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특화 인프라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추진 중
  - \* 중기부 구축사업 공모('21년5월), 인천 최종선정('21.7월)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스타트업 육성 지원 인프라의 긴급한 구축 필요
  -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 : '19년 2,690억 달러(약 297조원) → '26년 5,050억 달러(약 565조원), 연평균 8.2% 성장전망

※ K-바이오 랩허브는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의 입주 및 연구개발 지원, 실험장비 공유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검사·제조 등 지원역할 수행

- ▶ 사업기간 : (구축) '23 ~ '24년 / (운영) '25 ~
- ▶ 총사업비 : 3,750억원(국비 2,500억원, 시비 1,250억원)
- ▶ 구축위치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송도동 162-1)
- ▶ 구축면적 : 54,545㎡(16,500평)

## ④ 뷰티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22~'26)

- 바이오분야와 필수적으로 연계되며, 최근 세계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뷰티산업(화장품, 헤어, 네일 등)의 체계적 지원 필요
  - \* 세계시장규모('19년) : 약 480조원('14~'19, 연평균 4.5% 성장),  
한국 화장품 수출규모('20년) : 세계 3위(8조2877억 수출, 무역수지 7조 흑자)  
전국 대비 인천화장품 업체 비중 : 인천 약 10%(440개소) / 전국 4,252개소('21.6월)

- 화장품 R&D, 생산·판매·유통, 전문인력 양성 등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특화 인프라 구축

- ▶ 사업기간 : '22 ~ '26년
- ▶ 총사업비 : 500억원 이상(국비 290억원, 시비 및 민간 210억원 이상)
- ▶ 구축위치 :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인천시 남동구)
- ▶ 주요기능 : 글로벌마케팅센터, 뷰티 ME 센터, 뷰티 아카데미, 디자인&패키징 센터, 화장품 GMP 시설, 산학연관 협력플랫폼 구축 등

#### 4 기대효과

-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산·학·연·병 기술 혁신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 바이오산업은 자동차·반도체에 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혁신성장발판 마련

#### 5 건의사항

☞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희망인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위하여 인천지역에 백신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지정
- ② (바이오 원부자재 지원센터 구축 완료)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 ③ (K-바이오 랩허브 조기구축 완료) 신속한 예타 통과 및 사업 추진으로 임기 내 조기구축 및 작동개시
- ④ (뷰티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완료) 뷰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뷰티 지원센터 구축

인 천 광 역 시	미 래 산 업 과 장	김 준 성	032-440-5660	바이오산업팀장	이 규 석	032-440-3101
-----------	-------------	-------	--------------	---------	-------	--------------



## ⑥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

### 1 그간의 역사

- 인천은 대규모 수소생산 기반을 갖춘 동시에 대량 수소 수요처인 도시로, 수도권 수소수요 충족은 물론 수소 성장을 주도할 최적화 기반 보유
  - \* (생산) SK인천석유화학 등, (소비) 항만, 공항 및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배후 수요
- 수소에너지는 친환경 미래먹거리 산업이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 대두 및 인식 확산
-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생산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대규모 민간투자 진행 중

▶(SK) 액화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사업비 5,000억원 투자(서구, '21.3월)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연구·생산시설 1조원 투자(서구 청라, '21.7월)

-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주요 정부 과제 수행

▶인천 바이오·부생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대상 선정(기재부, '21.8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산업부, '20.11월),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국토부, '21.1월) 등 공모 선정

### 2 필요성

- 수소경제 조기진입 실현 및 탈석탄·탄소중립 도시 조성
  - 지역 내 부생수소 생산시설을 활용, 신속·대규모로 생산된 수소를 수도권에 공급함으로써 수소가격 안정화 및 수소경제 주도권 선점
    - \* 부생수소 연 3만톤(SK인천석유화학), 바이오수소 연 1,400톤 생산
  - 화석연료 기반에서 청정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산업 생태계 연계
  - 인천의 노후된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미래 핵심성장 산업으로, 기존 사업의 확장·전환 등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기업 지속성장 지원
  - 수소기업 및 부품·설비업체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인천의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연구·생산·소재·장비 업체 간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수소생산) 부생수소 연간 3만톤(SK인천석유화학(주), '23년 이후) 및 바이오 수소 연간 1,400톤(수도권매립지, '25년 이후) 생산  
\* 사업비: 총 1,506.8억 원(국비 704.4, 시비 117.3, 민간 685.1)
- (수소산업 기업육성) 수소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한 수소산업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  
\* 사업비: 총 895.9억 원(국비 467.5, 시비 419.8, 민간 8.6)

#### < 사업개요 >

- 위치 : 인천 서구(SK인천석유화학, 검단2산업단지, 청라국제도시 등)
- 기간 : '23~'27(5년)
- 규모 : 수소 생산 연간 약 3만톤, 수소기업집적단지 및 연구시설 구축
- 총사업비 : 2,402.7억원(국비 1,171.9, 시비 537.1, 민자 693.7억원)

### 4 기대효과

- 수소산업 선순환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수소기반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대한민국 수소산업 혁신 선도
- 청정수소에너지 전환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 CO<sub>2</sub> 저감효과 162,104톤, 청정공기 생산량 1,677톤('30년 기준)

### 5 건의사항

☞ 탄소중립 실현 및 차세대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① (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신속한 예타 통과 및 사업추진 지원
- ② (수소산업 인식개선) 수소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 전략 마련
- ③ (제도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수소산업 트렌드를 반영, 액화수소 등 수소 신기술 적용 관련 제도 마련 및 지원 확대

## ⑩ 항공정비산업(MRO) 및 공항경제권 육성

### ① 그간의 역사와 환경 변화

- (지역균형 발전론) 항공정비산업은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10)부터 지방 공항육성(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경남(사천)을 지원('17)
- (정부정책변화) 정부 관계기관 합동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1.8월)에서 인천공항 중심의 글로벌 항공정비산업 육성 발표 및 항공정비 연계 '인천형 일자리' 필요성 제기

### ② 필요성

- (국가 기간산업 육성) 항공수요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항공정비 수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항공정비산업의 국가 기간산업 육성으로 아시아 1등 MRO 허브 조성

\* 항공정비 해외의존도 : 2019년 정비대상물량 46%(1조 3천억)

\* (경제적 효과) ① 총사업비 4,600억원, ② 수출효과 2,198억원/년, ③ 청년직접고용 2,982명

- (인천산업구조위기) ❶GM중심의 자동차 제조업 위축 진행중 ❷기후변화에 대응한 내연기관 퇴출로 산업생태계 위기  
⇒ 뿌리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기술고도화, 사업 다각화 필요

- (항공정비태동) ❶IAI 항공기 개조사업 유치(5.4.), ❷아틀라스 항공기 중정비 센터 유치(7.19.), ❸대한항공 통합 엔진정비센터(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인천 항공기정비·개조사업 포트폴리오 완성

- (도심항공교통\* 등장) 전 세계적으로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체계의 상용화 추진(2025년 전후)으로 향후 비행체 부품, 정비산업 성장 예상

\* 도심내 저고도 공역을 전기수직비행체를 활용해 저소음, 친환경으로 비행하는 혁신적 항공교통체계로 자동차산업과 항공산업이 융복합하는 새로운 산업 형성 예상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① (교육훈련 기반조성) 항공기 개조-중정비-엔진정비에 필요한 초급~고급 인재 양성\* 기반 조성 ⇒ 청년일자리 창출
- ② (기업지원 기반조성) 인천의 자동차산업 기반 제조업을 항공산업으로 기술 고도화 및 산업 다각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 노동전환 추진
- ③ (미래산업 기반조성) 기존 항공정비 기술을 미래산업인 도심항공교통 정비 산업으로 연계 발전

### 4 기대효과

- 항공산업으로 뿌리산업(기존 제조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사업 다각화
- 대한민국 최초 UAM 상용화 도시

### 5 건의사항

- ☞ 인천형 항공정비산업(MRO) 기반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육성과 지원 필요

#### - < 3대 기반 6대 과제 추진 지원 건의 >

3대 기반	6대 과제
교육훈련기반	①항공우주 마이스터 고교 설립(~'25), ②항공산업 통합교육 훈련센터 구축('22)
기업지원기반	③영종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22~'29), ④항공산업 공용 기술장비 지원센터 설립('22~'26)
미래산업기반	⑤도심항공교통 시험·평가 지원센터 구축('22~'26), ⑥도심항공교통 인증센터 구축('22)

## ⑦ 산업단지 내 문화·여가 복합공간 조성

### 1 그간의 역사

- 남동국가산업단지는 1985년 조성 이래로 전통제조업을 주축으로 인천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 인천 산업생산 및 일자리의 30%이상 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동향/ '21. 6월)
- 현재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으로 기반 인프라 부족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대두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강화단지 선정('15.7) 및 재생사업지구 승인(국토교통부, '19.8.)을 통한 남동산단 재생사업 추진 중('15. ~'24.)
- 스마트산단 신규단지(산업부, '19.9.) 및 '21년 산단 대개조 지역(정부 일자리위원회, 산업부·국토부 합동, '20.5.) 공모 선정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20.~'23.)
  - 일자리 미스매칭의 근본적인 문제인 노후산업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사업을 계획 및 추진 중

- ▶ '21. 3. : 실행전략 수립용역 완료 (용역기간 : '20. 12. ~ '21. 3.)
- ▶ '21. 3. : 기업간담회 개최
  - ※ 주요내용 :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사업 취지, 내용 등 안내
- ▶ '21. 6. : 실행계획수립 용역 착수 (용역기간 : '21. 6. ~ '21. 12.)
- ▶ '21. 8. : 사업설명회 개최(온라인)
  - ※ 민간투자를 위한 민간대행구조고도화사업 컨설팅 및 참여 유도

### 2 필요성

- 전국 산단의 현안인 청년 근로자 부족(일자리 미스매치)에 효과적인 유입 정책 필요
  - 기존 노후 산업단지 개선 정책은 제조혁신·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환경 개선 등 산업 육성(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층 유입에는 한계
  - 청년 인식과 행동 메커니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브랜드·문화·생태 체험 공간 조성(소프트웨어)으로 정주 여건 및 삶의 질 개선
    - \* 일자리 미스매치 : 20~34세 부족 (현황 30.9% → 필요 63.6%)





- 장소와 사람이 모두 고려되는 산업정책 모델이 없어 국내 최초 비즈니스·문화 랜드마크로 선도 가능
- 산업단지가 단순 산업생산의 공간에서 벗어나 삶을 향유하는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대규모 주거공간과 인접한 특징을 살린 문화예술 소비 및 상업공간으로 대전환
- 물리적 장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위한 점·선·면 개념을 도입하여, 산단에 근로자 및 시민들의 휴식, 쇼핑, 체험, 경험을 위한 공간(점)을 조성

### 3 주요 사업·정책 내용

- ❶ (브랜드 문화체험 공간) 뷰티 미용 및 소비재 제품 기업들이 위치하는 대상지로 대상 기업을 연결하여 소비재 브랜드 체험공간 조성
- ❷ (복합 문화체험 공간) 지하철 역 등이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상지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 조성
- ❸ (생태 문화체험 공간) 남동 제1·2 유수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과 생태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노후 산업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젊은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대규모 주거공간과 인접한 산단의 특성을 살린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소비공간과 상업공간으로의 대전환
- 위치/기간 : 남동국가산업단지 (인천전역 확대 계획) / '22. ~ '28.
- 총사업비 : 3,919억원(국 584 시 160 민 3,175) 계획
- 사업량 : 산업문화공간, 문화콘텐츠 조성 등 36개 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산단의 주·야간 명소화로 확장되며 이를 통해 도시의 상징성, 공공성 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성 확보,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기대

## 5 건의사항

☞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의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① (국비지원)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규모 투자 재원 필요하나 민간 투자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문 조성에 국비 지원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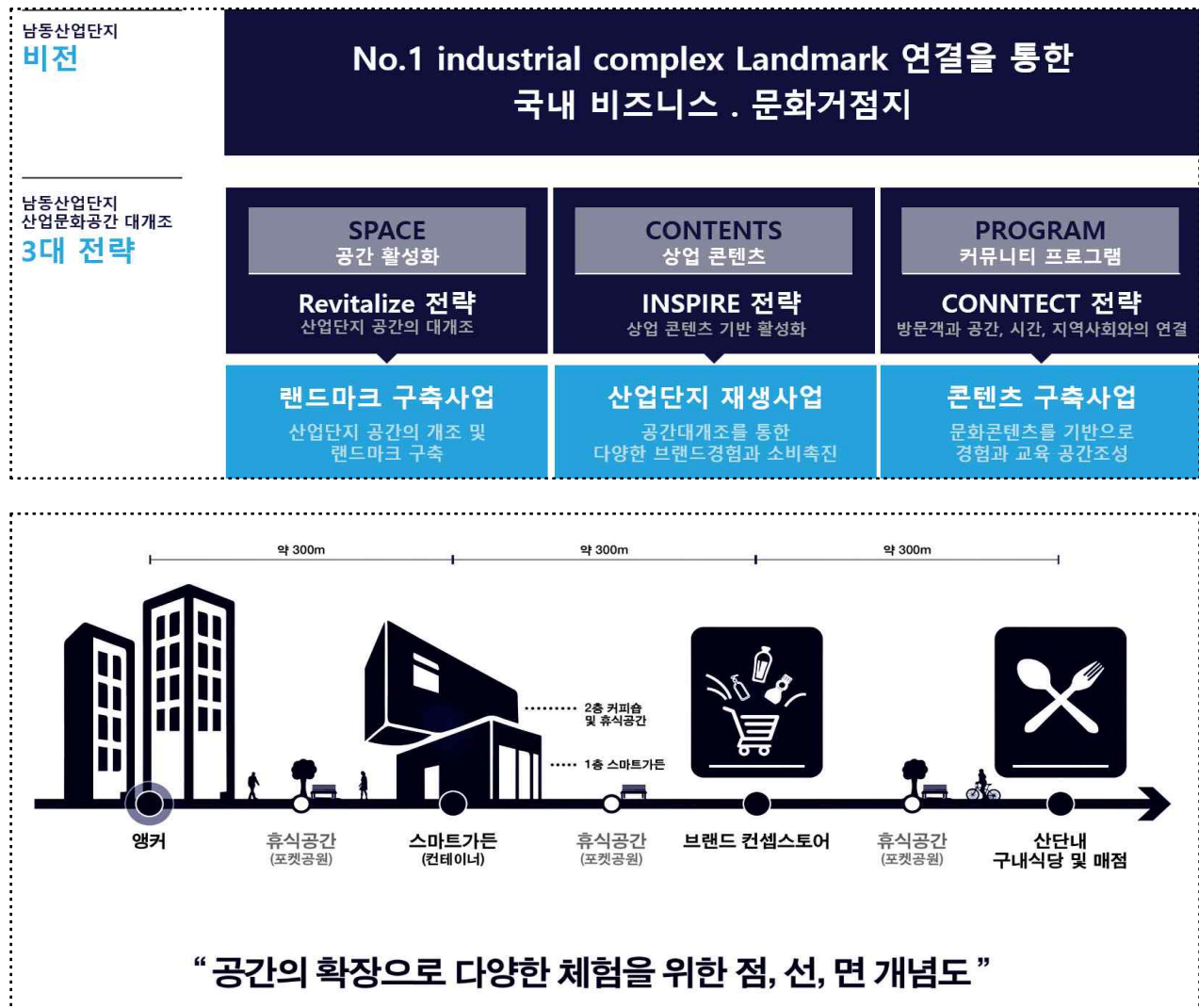
\*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사업 : 36개 사업 3,919억원(국 584 시 160 민 3,175)

- ② (인천중소벤처기업청 이전) 사업계획 중 대상지인 인천중소벤처기업청 부지의 활용을 통한 산단 랜드마크 설치(벤처·창업·소공인 지원시설) 필요

인 천 광 역 시	산 업 진 흥 과 장	이 남 주	032-440-5021	스마트그린산단 팀	최 용 대	032-440-4286
-----------	-------------	-------	--------------	--------------	-------	--------------

## □ 사업개요

- (목적)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노후 산업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젊은 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대규모 주거공간과 인접한 산단의 특성을 살린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소비 공간과 상업공간으로의 대전환
- (비전) **산업단지 랜드마크 구축을 통한 국내 비즈니스·문화 거점 조성**  
**‘낮에는 비즈니스공간, 밤에는 산업문화공간’으로**
- (대상지) 남동산업단지 (논현, 남촌, 고잔동 일원)



## ○ (내 용)

- (브랜드 문화체험 공간조성) 뷰티 미용 및 소비재 제품 기업들이 위치하는 대상지로 대상 기업을 연결하여 소비재 브랜드 체험공간 조성
- (복합 문화체험 공간조성) 지하철 역 등이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상지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 조성
- (생태 문화체험 공간조성) 남동 제1·2 우수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과 생태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

## □ 기대효과

- (산단 진흥) 문화·예술 체험공간, 협업공간, 생태탐방로 조성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산업의 전반적인 개조 및 진흥 도모
- (도시재생 활성화) 산단의 주·야간 명소화로 확장되며 이를 통해 도시의 상징성, 공공성 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성 확보,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기대

## □ 추진경과 및 계획

- (2020. 12.) : 실행전략수립 용역 착수
- (2021. 3.) : 기업간담회 개최
- (2021. 3.) : 실행전략수립 용역 완료
- (2021. 6.) : 실행계획수립 용역 착수(용역기간 : '21. 6. ~ 12.)
- (2021. 8.) : 사업설명회 개최(온라인)
- (2021. 11.) : 시범사업 시행



## ⑧ 을왕산 영상클러스터 조성 지원

### ① 그간의 역사

- 2014 AG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로 훼손된 을왕산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단지 개발 컨셉으로 지정 신청('19.9.) 하였으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후보지 미 선정\*('19.12.)
  - \* (미 선정 사유) 사업예정자 시행능력 의문, 영상수요 불확실, 투자유치 미흡 등
- 이후 영상전문기업 참여 등 시행능력 강화, 영상수요 통계 입증, 주요 방송국 제작센터 및 해외 투자기업 추가 유치\* 등의 사업계획 보완
  - \* 국내외 투자사, 전문개발사, 운영사, 입주사 등 총 51개사 투자의향 체결
  - \* 최근 해외자본(미국 소니픽처스, 영국 Pine Wood 등) 유치 위한 협의 중
-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위해 일정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 \* 통상 5년에 1번씩 일괄 지정 시행, '03년 최초 지정후 현재까지 4번 추가 지정

### ② 필요성

- 국내 영상산업 수요 급증, 수도권 영상콘텐츠 클러스터 부재
  - 글로벌 OTT 시장 급성장에 따른 영상산업 폭발적 성장(연 32%), 국내 영상제작 인프라 지방 분산, 소규모 물류창고 개조 등 시설 열악
  -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기업 공격적 투자('21년 5억\$)로 국내 시장 잠식, 글로벌 콘텐츠산업 선점 위한 영상클러스터 조성 시급
  - 영상콘텐츠 대형화 추세이나 수도권내 1,000평이상 스튜디오 전무,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지방으로 이동 제약, 촬영 어려움 호소
- 영상콘텐츠산업 집적화 및 혁신클러스터 적합지, 인천 을왕산
  - 공항 환승객('18년 802만명), 수도권 배후시장(26백만명) 보유 및 뛰어난 교통접근성(서울 40분내)으로 영상제작 적합지로 급부상

- 대규모 부지 확보(24만평), 주변 고층건물 없어 촬영 제약 없으며, 토지확보 용이(공항공사86%소유), 주변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 보유로 영상관계자는 영상클러스터 적합지로 을왕산 주목, 강한 참여 의지

#### ○ 공항경제권 관광·비즈니스 허브 조기 구축

- 인천국제공항 위상에 턱없이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 연접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와 시너지 기대(연간 600만명 관광객 예상)
-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 가능, 지역 주민 대다수 경자사업 개발 열망 (경자사업 개발 찬성 75.2%),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조기 사업 필요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① 영종국제도시 을왕산 경제자유구역 재지정('21~)

- 을왕산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통한 부지(24만평) 매입 가능

#### ② 글로벌 영상산업클러스터 조성('23 ~ '27)

- 아시아 최대 규모 영상클러스터 단지 조성
- 수중 · 다목적 실내스튜디오(27개동) 및 야외스튜디오(1만 7,000평) 조성
- 촬영 뿐만 아니라 관광 연계를 통한 거리 체험 등 관광 명소화
- 촬영, 편집(CG), 송출을 One-Stop 가능하도록 지식산업시설 건립
- 영상 전시, 콘서트, 시상식 등을 위한 미디어 컨벤션 시설 건립
- 관광객 유입을 위한 테마형 상업거리 및 숙박시설 조성

#### < 사업개요 >

-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77-4번지 일원
- 사 업 자: 민·관 공동개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민간 컨소시엄)
- 기 간: (토지조성) '21 ~ '24년 / (시설개발) '25 ~ '27년 / (운영) '28년 ~
- 규 모: 807,733m<sup>2</sup>(24.4만 평)
- 사 업 비: 2조1천억 원 / (토지조성) 2,300억 원 + (시설개발) 18,700억 원
- 사업내용: 복합영상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 지원시설(관광 · 위락 · 숙박)

#### 4 기대효과

- 대한민국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및 공항경제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 약 2조원, 세수유발 약 1.3천억, 고용유발 약 2만명 추산(~'27.까지)



#### 5 건의사항

☞ 4차 산업시대 문화콘텐츠 글로벌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상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① (조속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영상·문화·콘텐츠산업 집적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 을왕산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 국내외 영상투자자 이탈 우려에 따라 신규 지정 대신 개발계획 변경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지정시기 단축
- ② (차세대 콘텐츠 개발 지원) 영상콘텐츠 디지털 전환과 함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콘텐츠 개발 전폭적 지원
  - 을왕산 일원 실감콘텐츠 실증단지 조성에 문체부 등 참여 또는 지원

인 천 광 역 시	영종청라계획과장	강 영 훈	032-453-7037	용유무의계획팀장	우 창 식	032-453-7591
-----------	----------	-------	--------------	----------	-------	--------------



## 참고1 위치도 및 조감도

### □ 단지 조감도





## □ 단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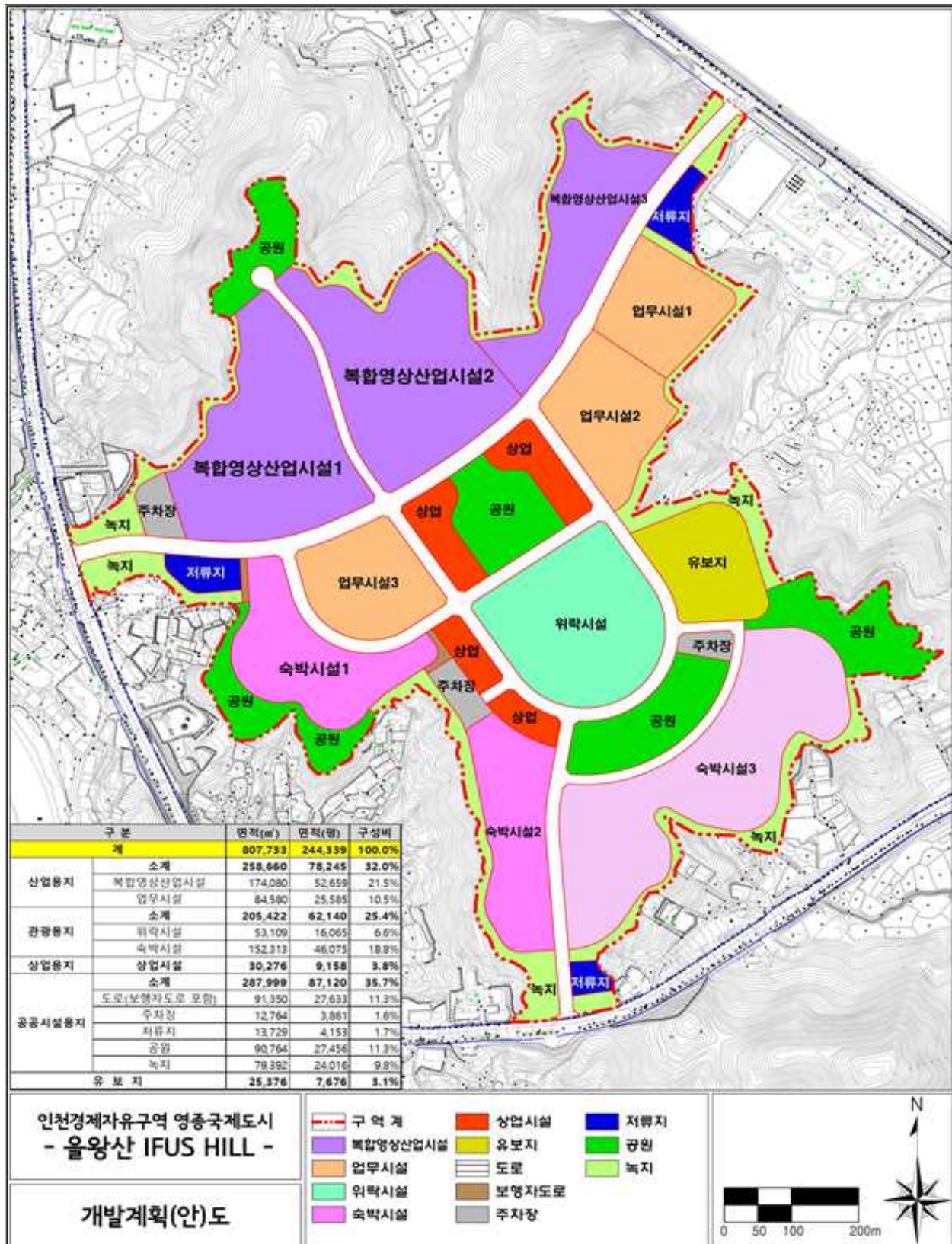


## □ 주요 도입시설 조감도





## 참고2 토지이용계획(안)



**㉔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1 그간의 역사**

- 강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남북 산업 평화벨트 보고('08. 6. 시장→대통령)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11~'30) 수립\*(행안부, '11. 7.)
  - \* (비전)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 (전략)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 \* 서해남북평화도로: 영종~강화 14.6km, 민자 1조 5천억원
-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계획 방침('15. 7, 경제청)
 

▶ 대상지역: 강화남단지역 면적 5.65km<sup>2</sup>(171만평), 사업비 2조 378억원

  - (영종~신도): 인천공항공사 지역주민 지원대책 사업으로 추진
  - (신도~강화): 강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금으로 추진
- 인천시,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 추진계획 수립('18. 7.)
  - \* 1단계(영종~신도): 재정사업 추진
  - \* 2단계(신도~강화): 남북경제 협력사업(정부) 등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및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사업 선정('19. 1.)
  - \* 1단계: 영종~신도(3.2km) 재정사업(예타 면제, '21. 1. 착공) / 2단계: 신도~강화(11.4km) 민자사업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 수립(국토부, '21.10. 예정)
  - \* (동서10축) 인천 강화~강원 간성 211.5km 자동차 전용도로 접경지역 도로 단계적 건설·개량

**2 필요성**

- 접경지역의 남·북~동·서축간 단절된 도로망 연결로 남북협력 촉진 및 평화통일 교두보 마련

< 한반도 신경제구상 3대 경제벨트 구축(통일부, 환서.동해 및 접경지역 경제벨트) >



※ (출처) 제5차 국토종합계획(국토부, '19.12.11.)

- 도서·접경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강화) 국가도로계획(국도 또는 국지도) 반영 필요

**경기일보**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I01면 인천

## '국도' 지정 외면 당한 서해평화도로

(영종~강화)

文대통령 공약이자 인천 역점사업  
국토부·기재부 최종 협의서 제외  
'균형발전' 이유 낮게 평가 지적  
市 "국도지정 필요성 적극 설명"

보다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서해평화도로를 국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서해평화도로도 후보 대상이었지만 기재부가 다른 지자체 도로로 구분한다. 국도로써 기능이 높지

도 매우 중요한 도로다. 이 같은 서해평화도로의 특징은 국도의 어떤 국도 지정 대상 선정 기준과 맞아떨어진다. 국토부는 교통량, 화물차 통행비율, 교통·물류기점과의 연계성, 국토균형발전도움 기준으로 했다.

**경기일보**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I03면 인천

## 서해평화도로 '암초'... 국도 지정 재도전 유일한 돌파구

중앙 정부가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의 국도 승격지점을 외면하면서, 인천시가 5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인천시, 5천823억 총당 '딱박' 경제적 떨어져 민자유치 한계 지역 정치권 '역할론' 급부상 국비 확보 '외신상당' 총력전

이 민자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영종~강화 연결도로 사업을 위해 로스코건설 등의 민자 유치를 추진했다. 당시 시는 단순히 통행료 수입

**인천일보**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001면 종합

## 인천 핵심 현안 '서해안권 발전계획'에 담겼다

시, 국토부·경기·충남·전북도와 함께 수립한 변경안 공고 6~7월 고시 예정

송도 바이오 핵심사업에 꼽히던 이어 MRO조성·백령공항 건설 등도 포함

2030년을 목표로 서해안권 미래상을 담은 발전계획에서 송도 바이오, 인천공항 항공정비(MRO), 서구 드론·도심항공교통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제시됐다. 서해남북평화도로·제2공항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사업도 반영된 가운데, 인천·경기·충남·전북을 아우르려

주요사업	세부사업
국가전략산업 집적 및 클러스터 조성	• 송도 바이오 혁신클러스터(핵심사업)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 인천공항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
국가적 생태·문화·관광 거점 조성 및 벨트화	• 남동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초국경·초광역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	• 기존 국가산업단지(주안)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전환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인프라 확충	• 소래습지생태공원 활성화(핵심사업)
	• 강화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
	• 인천 내항 문화적 전수공간 조성
	• 서해안권 10대 '보고싶은 섬' 조성(영종도·덕적도·청봉도)
	•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 해양쓰레기 대응 공동협력기반 조성(핵심사업)
	•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
	• 모도~청봉도, 서도, 송봉~대이척도 연도교 건설
	• 제2공항철도 건설
	• 백령공항 건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2021~2030) 인천 반영 사업 /시도·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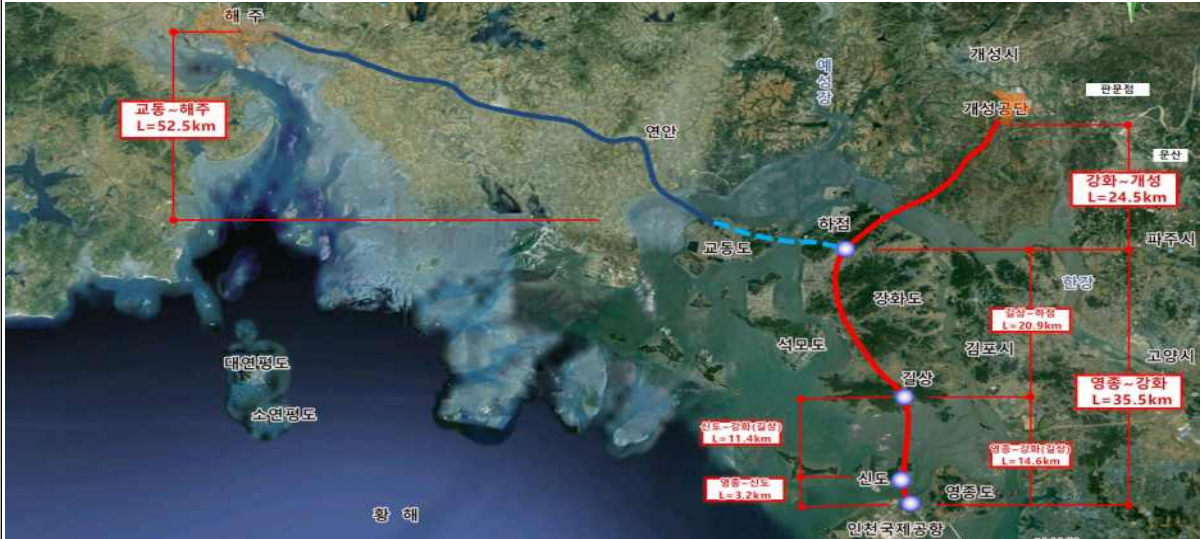


### 3 주요 사업 · 정책 내용

#### ①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영종(인천공항)~웅진(신도)~강화간 연결 35.5km

##### < 사업개요 >

- 사업구간: 인천 영종(인천공항)~웅진(신도)~강화(길상,하점)⇒장래 개성·해주
- 사업규모: L=35.5km(2~4차로), 도로등급(국도 또는 국지도)
  - 1단계: 영종~신도 3.2km / 2단계: 신도~강화(길상) 11.4km / 3단계: 강화(길상~하점) 20.9km
- 총사업비: 13,069억원(영종~신도 확장 1,090억/ 신도~강화 5,483억/ 길상~하점 6,496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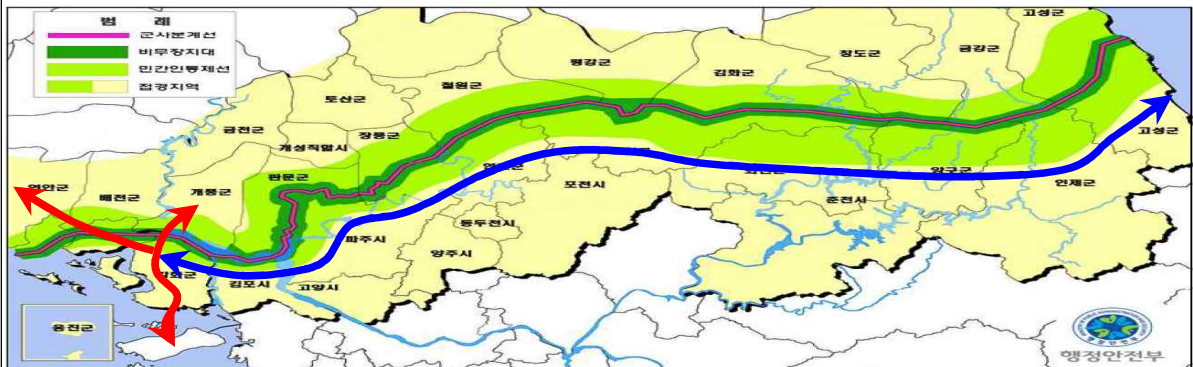


※ (관련부처) 국토부(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 기재부(예타 추진, 재정 지원), 통일부(남북교류협력사업 반영)

#### ② 접경지역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 인천~경기~강원간 단절구간 도로연결 86.3km

##### < 사업개요 >

- 위 치: 인천(영종, 웅진, 강화)~경기(김포, 파주)~강원(화천, 고성·속초)
- 사업규모: 단절구간 신설·개량 86.3km(2~4차로), 도로등급(국도 또는 지방도)
  - 계획 노선: 인천(인천공항, 웅진, 강화 38.3km)~경기(김포, 파주 27.2km)~강원(화천, 고성·속초 20.8km)
- 총사업비: 13,273억원(인천 5,057억/ 경기 3,124억/ 강원 5,092억)



※ (관련부처) 행안부(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기재부(예타 추진, 재정 지원), 국토부(국가도로계획반영)

#### 4 기대효과

- 영종~강화와 장래 개성·해주간 연결로 남북교류협력 교두보 마련
- 접경지역 동서남북축 도로망 연결로 관광·문화산업 교류 활성화로 국가 균형발전 도모

#### 5 건의사항

☞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강화, 35.5km) 국가도로망 건설 계획 반영

-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 또는 '제6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 반영

☞ 접경지역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인천~경기~강원 86.3km)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및 국가간선도로망 동서10축 기점 변경(강화→인천공항)

- 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 반영
- ② (국가간선도로망 동서10축 기점 변경) 동서10축(인천 강화~강원 간성, 211.5km) 기점 변경(강화→인천공항) 및 영종~강화(35.5km)간 연결 우선 추진



## 참고 1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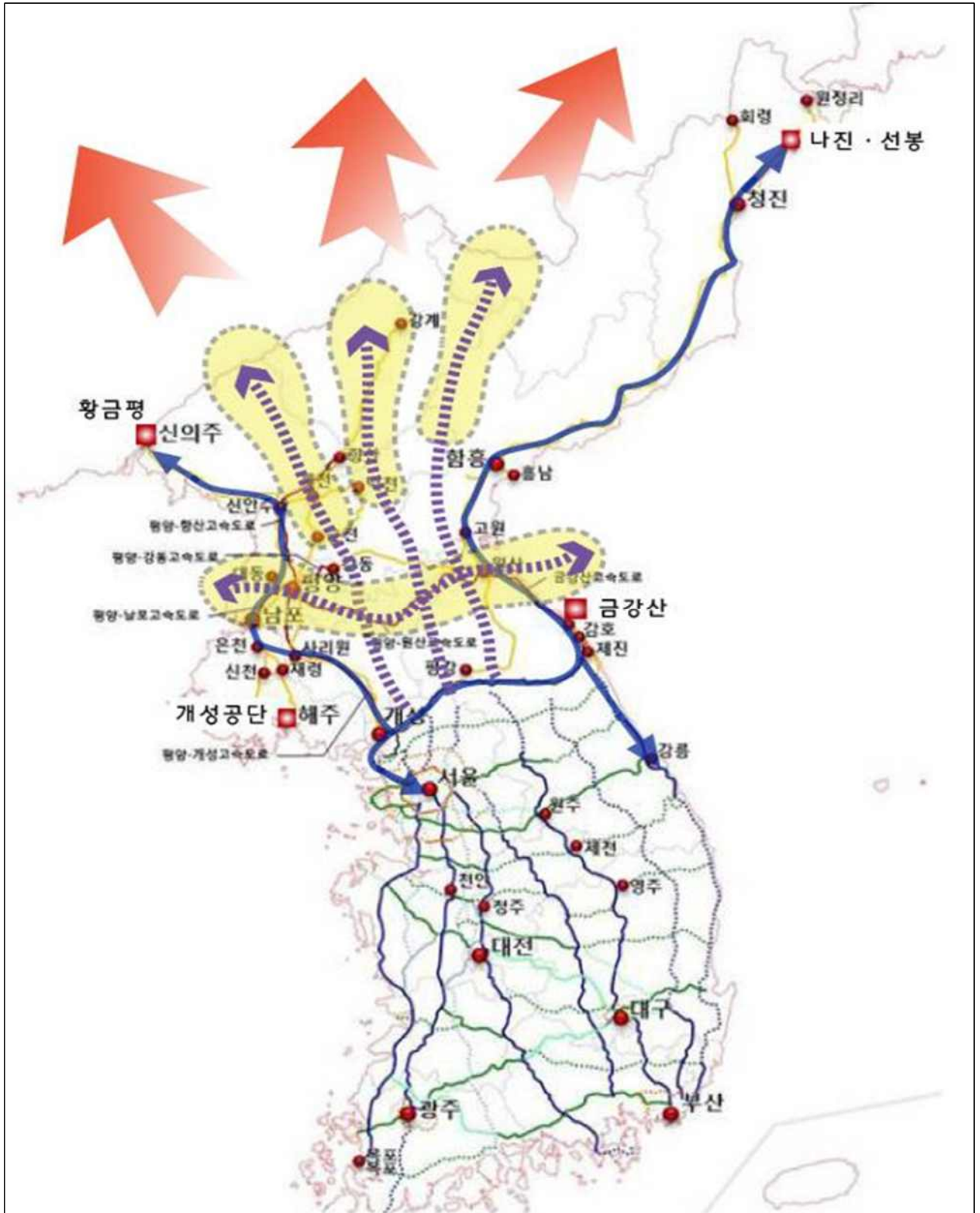


## 참고 2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안)(’21.~’30.) 발췌

□ 서해남북평화도로와 동서10축(강화~고성) 및 남북1축(강화~김포)과 연결 필요



### 참고 3 통일 대비 한반도 중심부 고속도로망 구축



(출처) 동서평화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보고서(한국교통연구원, '13. 5.)

## ㉔ 녹색기후기금 복합단지(GCF Complex) 조성 지원

### 1 그간의 역사

- 녹색기후기금(이하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 송도 G타워 사무국 출범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전략, 녹색기술센터(GTC)는 기술, 녹색기후기금(GCF)은 재원을 담당하며 Green Triangle을 구성
- 현재 GCF를 비롯해 GGGI 및 CTCN(기후기술 네트워크) 지역 사무소가 G타워에 입주하였으나 GCF는 국제회의장을 갖춘 독립건물이 없고 관련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취약

- ▶ G타워에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 및 공간 부족
- ▶ GTC(서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흐름에 따른 지방이전 검토 중

- GCF 등 국제지구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집적화를 위한 '22년 GCF Complex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국비 확보

### 2 필요성

- 국제기구 위상(본부) 맞는 전용공간 확보 및 업무분산 사전 차단
  - 국제회의장 확보 및 VIP 경호·의전 등 취약성 해소
  - 기금·조직 확대에 G타워내 공간부족 예상으로 사무공간 확보 시급
    - \* G타워 15개층 중 12개층을 사용 중이며 2~3년 내 소진예측, 건립기간 등 최소 5년 이상 소요
  - 공간확보에 대한 별도의 대안이 없을 경우 GCF의 분산 및 해외 이전(대륙별·국가별 사무소 설치) 사전 차단을 위한 대응
    - \* GCF 사무국 유치시 경쟁국가였던 독일 등에서 지역사무소 개설 움직임 지속 포착

#### < GCF 기금 및 직원 규모 > 지속적 확대 예상

- ▶ (초기재원) 103억USD ⇒ (1차 재원보충) 100억USD 추가(실출연금 83억USD/ '20.12.)
  - G7 기후변화 재원 제공 약속('21.6) : 매년 1,000억USD
  - GCF 승인사업 매년 증가('21.6) : 177건 총 333억USD (GCF 지원 89억USD)
- ▶ GCF 정규인력 :('14년) 48명 → ('17년) 140명 → ('18년) 250명 → ('21년) 400명
  - 정규인력 외 컨설턴트·인턴 등까지 포함시 규모는 더욱 확대



- GCF 콤플렉스 건립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주요 기관의 입주 및 집적화
  - GCF, GGGI 및 CTCN 지역사무소, GTC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기관들을 비롯해 다자개발은행(MDB) 한국사무소나 GCF 인증기구 기관들까지 입주
  - 입주기구·기관을 통해 녹색기후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 국제기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19대 대선 지역공약 「GCF 활성화를 통한 녹색환경금융도시 송도 건설」
  -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인 녹색금융도시 조성을 위하여 GCF 콤플렉스 조성을 통해 연관기관 집적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 3 주요 사업·정책 내용

#### ① GCF Complex 조성

- 위 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4-1,2,3
- 부지면적 : 18,500m<sup>2</sup>
- 규 모 : 연면적 90,000m<sup>2</sup>(지상 33층, 지하 3층)
- 사 업 비 : 2,634억원 (인천시 부지제공 140억원 포함)
  - \* 2022년 국비 6억 확보(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 사업기간 : 2022 ~ 2028
- 공간기능
  - GCF 등 기후관련 국제기구, 국제인증기구, 비즈니스 컨설팅 집적화
    - \* 주요기구: GCF, GGGI, CTCN아태사무소, GTC,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 GCF 투자사업 관련 국가간·국제기구 간 국제비즈니스 공간

#### ②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시대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우리나라에 유치한 GCF, GGGI, GTC 등 녹색기후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량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국제기구와 연계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기회제공을 통한 글로벌 녹색기후 산업 허브 구현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이해 당사자간 교류 공간제공을 통해 관련 기업 및 기관 유치 등 녹색기후산업 생태계 조성



#### 4 기대효과

- 녹색환경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후변화 관련 각종 활동과 업무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수요를 바탕으로 녹색·기후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인천 지역 내 강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
- 인천 소재 녹색·기후기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해외 판로개척 지원

#### 5 건의사항

☞ GCF 본부 국가로서의 위상제고와 녹색환경사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① (GCF Complex 국비 조성)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에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 ②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제기구의 “공공청사” 또는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석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참고 1 조감도 및 공간활용 계획

### □ 조감도(안)



### □ 공간활용 계획

#### < GCF 콤플렉스 공간활용 계획 >

총 규모	32개층
녹색금융인증 금융기관, 컨설팅	2개 층
국가별 NDA	1개 층
GGGI, GTC, CTCN 등	5개 층
GCF 본사	22개 층
국제 회의실	2개 층

#### < GCF 콤플렉스 공간기능 >

- GCF 유엔 및 국제기구, NDA 등 인증기구, 금융 및 기업 집적화
  - 주요대상 : GCF, GGGI, CTCN 아태사무소, GTC, 기타 유엔기구
- GCF 투자사업 관련 국가간 · 국제 기구간 국제비즈니스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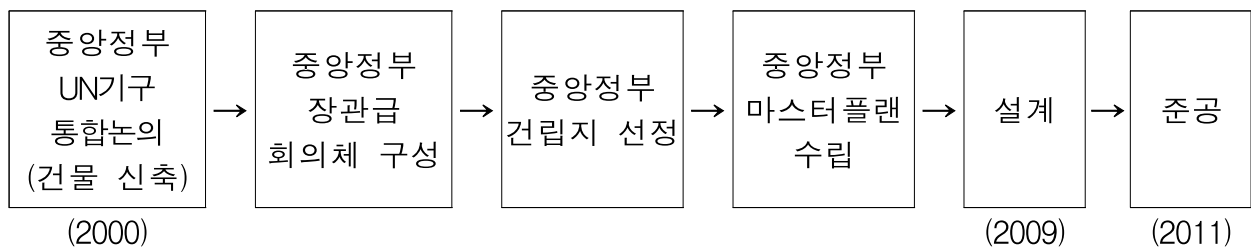
## 참고 2 외국 사례

### □ 국가별 UN건물 건립 현황

국가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도 시	뉴욕	본	비엔나	제네바	코펜 하겐
명 칭	UN사무국	UN캠퍼스	UNO-City		UN-City
상주인원	8,119	1,000	3,633	9,000	9,000
주 기능 (역할)	유엔총회빌딩, 컨퍼런스빌딩, UN공원조성등 UN복합단지 성장	UN캠퍼스를 중심으로 클러스터화	국제원자력기구, 유엔공업개발기구, 석유수출기구 입주 * 뉴욕, 제네바에 이어 제3의 UN도시 로 성장	민간법률재단 (FIPOI)이 국제기구 공간 지원 및 관리 (부동산관리, 자금조달, 컨퍼런스룸운영, 건물신축 등)	(제1캠퍼스) 11개 UN기구 입주, (제2캠퍼스) 유니 세프 글로벌 물류 창고(세계최대규모) * 인공섬에 유엔시티조성으로 보안성강화 및 관광명소화
주체	정부	정부	정부(65%) 시(35%)	FIPOI (정부설립재단)	건립주체:정부 시행:지방공기업 자금조달:연금기금
형식	(부지)개인기부 (건축)UN	연방건물 무상임대	신축 무상임대	정부자금조달 (무이자 50년 상환)	신축 양도

### □ 덴마크 (코펜하겐 UN-City) 사례 분석

#### ○ 추진경과



#### ○ 덴마크(코펜하겐)는 정부와 시, 지방공기업, 사회보장연금이 각각 역할체계를 정립하여 건립한 사례

정 부	시 · 지방공기업	사회보장연금
· 연관 부처간 장관급 의체 구성 · 건립지 선정, 마스터플랜수립	· 사업 발주, 건물 건축 * 공기업:코펜하겐 도시·향민개발공사	· 자금지원(기금)

\* 자료 : 「송도 기후변화 지식경제 허브구축을 위한 글로벌그린경제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 연구용역(2016, 서봉만) / 「GCF연관산업 육성과 송도 녹색기후금융도시 조성방안 연구」(2018, 산업연구원)







